

목 차

주제발표.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조직 역할과 과제 모색	1.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사례발표 1.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 활동과 방향	25.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국장	
사례발표 2.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42.
	박재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센터장	
토론1.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토론문	57.
	정경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토론2.	서울시 노동자 권익 중간조직의 발전방향	59.
	조성주 前 서울시 노동협력관	
토론3.	민간단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조직 역할과 과제	61.
	한지혜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센터장	
토론4.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사례를 통해 본 몇 가지 과제	63.
	나상윤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센터장	

주제발표.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조직 역할과 과제 모색

-노동권익센터와 비정규직지원센터 사례중심으로-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주제발표]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조직 역할과 과제 모색* - 노동권익센터와 비정규직지원센터 사례 중심으로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I. 머리말 - 문제의식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model employer)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모범사용자’ 역할은 집단적 노사관계와 개별적 노사관계 차원 모두에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과 다른 차이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노사 대등의 원칙에서 모범 사용자 원칙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지방정부 노동정책 수립과 노동조합과의 지역사회 개입전략이 맞물려 혼용되기도 한다.

한편 그간의 공공부문 노동정책이 ‘공공기관’에 국한된 것과 달리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지난 민선 5기부터 시작하여 현재의 민선 7기까지 지방정부에서 각기 나름의 노동정책이 광역(서울, 광주, 경기, 충남 등)과 기초(아산, 안산 등)에서 수립되면서부터다. 서울시 노동정책 모델이 지방정부의 일정한 기준(보편성의 준거)이 되고 있다.

지방정부 노동정책 제도화 수준은 ‘조례’(노동자권익, 생활임금, 감정노동, 노동이사제 등), ‘행정조직’(노동정책 행정조직/부서, 전문인력 활용), ‘정책·사업’(노동정책 기본계획, 세부 사업들), ‘중간지원조직’(각종 노동자 지원 센터, 노동권익센터·감정노동센터·상담소), 노동자 및 외부 전문가 참여 ‘거버넌스’(각종 위원회, 협의체 등) 등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 보편성과 함께 지역별 차이를 강조하기도 하나, 대부분 비슷한 제도들이 수립(제도와 정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우리나라 ‘노동행정’은 해방과 건국 이후 국가 및 국가기구 영역이었지, 지방 정부(광역-기초) 영역은 권한도 없었고, 일부 노조 설립 신청·노동쟁의 예방과 신속 공정 해결 노력(제10조, 제49조)과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활성화 협력(제2조, 제3조) 수준이었다. 이런

이유로 지방정부 행정조직들을 보면, ‘경제’, ‘산업’, ‘기업’, ‘투자’ 관련 부서는 있었어도, ‘노동’ 관련 부서는 1991년 지방자치(민선 1기) 시행 이후 존재하지 않았었다.

[표1] 주요 지방정부 노동행정 제도화 현황 - 조례, 조직, 정책, 지원조직(2019.5)

지역	조례 명칭	행정 조직 명칭	지원 조직	
광역시	서울	노동자권익보호 조례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센터 노동센터
	광주	근로자권익보호 조례	일자리노동정책관	비정규직지원센터 경기노동권익센터
	경기	근로기본 조례	노동국	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	노동인권 보호 조례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2019년 하반기 예정
	경남		일자리창출과	비정규직지원센터
	울산		일자리총괄과	2020년 예정
	부산	노동자 권익보호 조례	인권노동정책과	2019년 하반기 예정
	강원		일자리과	
	대전		일자리노동경제과	노동권익센터
	제주	근로자 권익보호 조례	일자리과	비정규직지원센터
기초	전남		일자리정책과	비정규직지원센터
	경기 안산	노동인권 보호 조례	일자리정책과(노동정책팀)	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 아산	노동인권 조례	사회적경제과(노동정책팀)	노동상담소 비정규직지원센터
	경기 성남	준비 중	고용노동과	
	경기 수원		고용노동과	
서울 강동		노동권익센터(*노동정책 행정부 명칭, 부서 팀 수준 운영)		

[표2] 특·광역시 지방정부 주요 노동정책 15개 조례 현황 검토('19.5)

	노동정책 유관 조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세종
1	*노동자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			○		○	
2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		○		○		
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		
4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5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			○		
6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	○	○					
7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	○	○	○	○	○	○
8	생활임금 조례	○	○	○	○		○		○
9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	○
10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		○		
11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노동권익센터)	○			○				
12	비정규직 유급평가 관련 조례(*서울시 보건의료, 소상공인)	○							
13	프리랜서 권익보호 관련 조례(*서울시, 경기도)	○							
14	산업노동안전 관련 조례(*경기도, 서울시 노동정책과 예정)	△							
15	성별임금공시제 관련 조례(*서울시 성평등노동팀 예정)	△							

2019년 상반기 기준 국내 주요 지방정부 핵심 노동정책 관련 조례는 [표2]에서 확인 가능 하듯 약 15개 내외로 구분 가능하다. 노동정책 관련 조례는 일자리나 고용을 제외하면 지역 별로 거의 대부분 노동단체 지원, 근로자복지시설, 노사민정협의회(3개)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지난 5년 사이 노동정책 관련 조례는 생활임금, 감정노동 관련 조례 정도만이 추가된 상황이다.

결국 지방정부 노동 관련 조례는 현재의 변화하는 산업구조 및 기술발전과 맞물려 기존의 표준적인 계약방식과 고용관계를 벗어난, 비표준적 계약과 고용관계(모호한 고용관계,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 증가 등에 대응하면서도,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자 범위의 확장 그 맥을 같이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대부분의 지자체에 기업지원 관련 행정부서는 있으나 노동 전담 행정조직은 없으며, 노동정책을 뒷받침할 조례를 제정한 곳도 243곳 중 5% 남짓에 불과하다. 또한 서울시를 제외한 여타 지자체의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중간지원조직(센터), 거버넌스 제도화 수준은 미흡하다.

특히 최근에는 노동상담 및 홍보, 노동교육, 비정규직, 생활임금제, 감정노동 등 다양한 지방정부 노동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실행 및 지원조직으로 각종 센터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각 연구조사 및 선행연구들은 지자체 노동정책과 연동된 센터 현황과 실태 분석이나 사업 검토(김종진, 2016; 이정봉, 2017) 그리고 노동운동의 새로운 시도와 제도적 포섭 논의(노성철·정홍준·이철, 2018) 등이다.

각 센터들은 초기 비정규직센터 수립을 시작하여, 지난 몇 년 사이에는 노동권익센터 신설이나 개별 정책과 연동된 센터·기구(감정노동 센터, 이동노동자쉼터 등)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중간지원조직인 각 지역의 ‘노동센터’라는 조직의 동형화(Isomorphism) 현상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글은 주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노동자권익 보호 및 증진(조례, 정책)과 맞물린 노동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 센터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II. 국내외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및 노동자 지원조직 검토

1. 해외 지방정부 노동자 지원조직 현황

역사적으로 외국 주요 지방정부 노동정책은 주로 20세기 이후 진보정당이 집권하면서 형

성되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모두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스트리아 빈의 경우 사회주의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1918년)하면서 진보적인 내용의 정책들이 수립됐다.¹⁾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 자본주의 경제구조 상 노동력 재생산 영역은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생활세계(Life World) 필요를 포함하여, 집합적 소비 영역(지역사회의 집합적 소비영역: 주택, 의료, 교육, 보육, 환경, 등을 포함)이 전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 시장’에 맡겨지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생활세계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각종 정책 개입을 통해 새로운 모색(집합적 해결 방식) 추진하기 위한 운동방향이 주요 활동 목표였다.

이런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산업과 고용정책, 대중교통, 보건복지, 공동주택(前 시영주택), 교육·보육 등의 영역은 지자체 정책과 행정이 노동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들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외국의 주요 지자체들은 도시의 취약계층을 범주화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등 주로 일자리 고용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²⁾ 특히 고용과 실업문제가 이들 국가의 거시정책 핵심의제로 자리 잡으면서 지방정부에서도 지역 내 고용과 일자리 사업들이 지자체 사업의 주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표3] 외국 주요 국가 및 지방정부 노동정책 영역, 지원조직

고용일자리정책	각 의제별 정책	보호&지원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뮌헨, 함부르크 → 취약계층, 이주노동 • 독일 베를린, 브레멘 • 이탈리아 밀라노 • 미국 위스콘신 →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 • 노르웨이 트로헤임 → 민간위탁 직영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영국 등 → 생활임금 • 스웨덴 예테보리, 이탈리아 보첸 → 노동시간 단축 • 오스트리아 빈 → 노동자 교육훈련 • 캐나다 퀘벡 등 → 동노동임, 연대임금 • 미국 뉴욕주 →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 민중의 집 • 미국 → 노동자센터 • 스웨덴 → 팔메의 집 • 오스트리아, 독일 → 노동회의소

주 : 성평등 노동, 노동복지 정책 관련 사항은 [표] 내용에서 다루지 않음.
 자료 : 김종진(2017), 『함께걸는노동』, 서울연구원의 내용을 수정 보완.

1) 오스트리아 빈의 대표적인 사회정책은 시영주택, 공공교통, 직접적인 고용 창출, 시 자체 고용 등인데, 시 정부는 1914년부터 1945년 사이에 실업구제, 보건, 교육, 주거 사회보장 등의 공공정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빈의 개입주의 정책은 ‘붉은 빈’(Red Vienna)으로 불린다.
 2) 우리나라는 미국 위스콘신이나 아일랜드 등의 노사정 일자리 모델들이 잘 알려진 국가와 노동에 초점을 둔 노동체제(labor regime)보다는 노동시장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고용체제(employment regime)가 지난 10여년 지속되었다.

외국의 대표적인 지역고용정책은 주로 연방정부 지역고용정책의 직간접적인 지원(법령, 예산, 조직 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등이다. 영국, 미국과 같은 영미식 자유경제시장 국가들과 유럽식 조정된 시장경제 국가 간의 차이는, 지역 고용정책에 이해당사자 특히 노동단체가 개입하고 있는지 정도다. 그럼에도 독일 브레멘, 스웨덴 예테보리,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스위스 취리히, 캐나다 퀘벡 등 몇몇 지역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정책과 유사한 정책과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³⁾

한편, 외국 주요 국가 지자체들은 노동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지원 조직을 갖추고 있다. 유럽의 경우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이 오랜 기간 동안 집권을 한 경험이 있는 곳에서는 활동 공간으로서 노동자 자치 기구인 협동조합이나 민중의 집 그리고 노동자회의 소와 같은 조직이 있다. 스웨덴의 ‘팔메의 집(Olof Palme place)’도 이와 유사한 형태이다. 이들 모두 19세기 산업화 이후 형성된 영국의 팝(pup), 이탈리아 협동조합 부설 바(bar)인 ‘치르콜로(circolo)’ 등과 함께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노동문화를 형성하는 지역조직의 기반이 되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유럽과 달리 노동자 조직화에 근간을 둔 거점들이 노동조직의 자원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인 노동자센터(worker center)를 들 수 있다. 노동자센터는 주로 이주노동자들이나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대부분 민간재단의 기부 또는 회원들의 후원금을 통해서 운영된다. 또한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탓에 활동가 한 명이 다양한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지방정부와 민간차원의 협동조합, 민중의 집, 지역비정규센터와 같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대안적 노동자 공간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노동운동의 지역사회 운동 전략을 연구해온 아만다 타터솔(Amanda Tattersall)은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의 관계 모형을 세 가지 수준으로 정리하며, 도구적 노동조합-지역사회의 관계(Instrumental Union-Community Relationship) 모형, 노동조합과 지역사회 결속(Union-Community Coalitions) 모형, 지역사회 노동조합주의(Community Unionism) 모형으로 구분한다. 타터솔은 가장 효과적인 수준의 유형을 ‘지역사회 노조주의(Community Unionism)’라고 개념화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도 유용한 준거 틀로 적용할 수 있다(김현우 외, 2005).

3) 독일 브레멘이나 이탈리아 밀라노의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를 비롯해, 영국 런던의 생활임금,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의 기본소득정책, 이탈리아 보첸의 노동시간 단축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영국과 미국과 같이 1990년대 후반 노조 조직화 사업이 활성화된 곳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노사관계 특성이 반영되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 및 산업구조 변화 등과 맞물려 기존과는 다른 고용구조가 형성되고, 비용 절감 및 관리규제의 회피 등의 사용자 우위의 법제도나 노사관계가 형성되면서 미조직,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화하기 위한 운동(전략조직화)이 나타났고, 유럽의 경우 단체협약 적용 확대 등을 통한 방식으로 발전했다.⁴⁾

[표4] 노동조합-지역사회 연계 모형

	도구적 노조-지역사회 관계	노조-지역사회 연합	지역사회 노조주의
이슈와 공통 이해	- 모든 이슈	- 모든 이슈 - 때때로 노조가 선별한 이슈	- 노동자 사회 비전 기반 이슈들 - 참여 조직의 상호 이해에 연관된 이슈들
구조	- 단일한, 개별적 요청 - 공식적이거나 지속적 관계 구조 부재	- 모든 구조 - 노조가 주도하는 경향	- 노조와 지역사회 조직이 공동 의 사결정 구조에 결합 - 연합 내에서 신뢰와 호혜의 관계 - 개인/평조합원 참여의 여지 보장
장소	- 모든 수준	- 모든 수준에서 관계 가능: 지역, 시, 주, 국가, 국제 등	-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향 - 자본이 고정된 산업 에서 성공적 인 경우 많음. 서비스, 광산, 공공 부문 등
노조 참여	- 도구적 참여에 국한	- 노조 간부의 참여 - 도구적 참여 - 조합원들로부터 분리된 / 별도의 운동	- 노조가 계획수립 과정에 자원을 제공하여 결합(buy-in) - 임금과 노동조건을 넘어서는 노조 의 비전 - 연합에서 조합원들의 활발한 참여

* 자료 : Amanda Tattersall (2005), 김현우·이상훈·장원봉(2005) 재인용.

그런데 우리와 유사한 영미식 나라들에서는 기존 노동조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미조직·저임금, 이주노동자 등의 조직화와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존 노사관계 질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기구로 ‘노동센터’(Worker Center) 설립을 통해 다양한 노동권보호 및 권리보호 사업들을 진행했던 것이다. 미국은 1992년에 5개 정도의 센터에서 2007년까지 80개 도시에 걸쳐 160개의 센터가 생겨났고 2015년 기준 250개 이상의 노동센터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Fine 2011; 노성철·정홍준·이철, 2018). 미국 노동센터 운동은 특히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중심에 두고 시작되었다.⁵⁾

4) 노조 조직화 관련 논의는 Herry & Adler(2004), Frege & Kelly(2004), Hurd & Milkman & Turner(2002), Turner(2005), Confield & Mcammon(2003), Fiorito(1995) 등을 참조할 것.

5) 미국 대부분의 노동센터들은 민간재단의 기부 또는 회원들의 후원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노동센

2. 국내 지방정부 노동자 지원조직

국내 주요 지역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단체나 센터들이 설립돼 있다. 초기에는 민간단체(노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자생적 노동센터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지방정부 민간위탁센터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다. 2019년 6월 기준 노동권익 및 비정규노동자 지원 단체 및 센터는 전국에 약 52개(독립센터 21개, 지자체 설립 센터 34개/서울12개, 노동상담소, 법률상담소 등 제외) 정도가 있다.

지역 및 각 센터마다 지역적 분포와 설립연도 등 차이가 있는데, 우선 지역별로 서울에 가장 많고, 경기지역과 인천 등 수도권 이외 지역 순이다. 지자체 위탁센터들은 해당 지역을 근거지로 사업을 한다. 따라서 지역별 사업영역과 활동 또한 지역 내 비정규·영세사업장 밀집 정도 및 규모, 지역의 활동준비 정도, 그리고 정치적 상황 등이 영향을 받고 있다.

[표5] 국내 주요 노동자권익센터 및 비정규지원센터 현황 정리(2019.7)

노동사회단체 설립 (독립 센터 21개)	지방정부 설립 센터 - 전국(22개) (다수 민간위탁)	지방정부 센터 - 서울(12개) (다수 민간위탁)
군산 비정규노동인권센터	거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울 노동권익센터
비정규노동선교센터	경기 노동권익센터*(직영)	서울 감정노동센터
서울동부 비정규노동센터	경기 북부노동인권센터	성동 노동자복지센터
서울서부 비정규노동센터	경기 비정규직지원센터	서대문 노동자복지센터
안산시흥 비정규노동센터	경남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한)	구로 노동자복지센터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경남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민)	노원 노동자복지센터
인천 비정규노동센터	경남 여성비정규직지원센터	성북 노동권익센터
충남 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시 노동센터	강서 노동복지센터
평택 비정규노동센터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광진 노동복지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당진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관악 노동복지센터
경북 노동인권센터	대전시 노동권익센터	양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남부 노동상담센터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예정)
양천 노동인권센터	사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중랑 노동자종합지원센터(예정)
은평 노동인권센터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마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예정)
음성 노동인권센터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은평 노동자종합지원센터(예정)
청주 노동인권센터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영등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예정)
충남 노동인권센터	양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도봉 노동자종합지원센터(예정)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 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서울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직영)
부산 여성노동센터	울산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6곳

터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활동가가 여러 가지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아 그들 사이에 역할 분담이 상대적으로 모호한 반면,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그에 걸 맞는 자발성과 참여지향적인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Fine, 2011).

노동사회단체 설립 (독립 센터 21개)	지방정부 설립 센터 - 전국(22개) (다수 민간위탁)	지방정부 센터 - 서울(12개) (다수 민간위탁)
강서양천 민중의집	익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1)대리(1) 2)퀵(1)
마포민중의집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3)이동노동자(2) 4)미디어(1)
	제주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5)서틀버스(1)

* 주 : 1) 서울시 노동자 관련 지원센터는 행정조직에 따라 △노동자 지원센터(노동정책과 : 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센터, 노동자복지센터)와 △유관 노동자 지원센터(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직장맘센터)로 구분.
2) 2019년 하반기 제주(이동노동자 쉼터), 충남 및 부산(노동권익센터), 2020년(울산) 각 센터 설립 예정
3) 각 지자체 노동상담소, 법률상담소는 노동권익센터 및 비정규지원센터 현황에서 제외

국내 지역 사회 노동자 권익 관련 중간지원 조직인 센터 설립 시기 흐름은 △ 정치적 플랫폼화 - 비정규센터 등장 시기(2003년~2007년), △ 독자적 운동 플랫폼화 - 독자적인 지역 비정규 노동운동 시기(2008년~2011년), △네트워크 운동 플랫폼화 - 각 지방정부 비정규직지원센터 및 노동권익센터 설립 시기(2011년 이후~) 3개 시기로 구분 가능하다(노성철·정홍준·이철, 2018).

각 비정규노동자 지원센터들의 설립 시기별 특성을 보면 울산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기초자치단체(울산 북구청)가 민주노총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첫 사례다. 울산북구 의회는 2003년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진보정당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거나, 혹은 야당과 정책연대를 하면서 여타 권역에도 비정규센터가 생겼다. 대표적으로 전주시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나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등이 있다.

2010년 이후에도 비정규센터의 설립은 계속되었는데, 이 시기의 상황은 이전과는 약간 다르다. 2010년~2012년에 설립된 센터들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설립된 반면, 2013년~2015년에 설립된 센터들은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와 해당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일치하면서 생겨났다. 최근 설립된 대전, 광주 등 광역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대표 사례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장 선거 전후 과정에서 노동단체와의 협약이나 요구들이 반영되어 설립됐다.

2011년 민선 5기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를 중심으로 하여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노동권익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민선 7기 현재 직영 센터(경기노동인권센터, 서울 강동구노동권익센터)와 민간위탁센터(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 약 12개 자치구 노동권익센터, 광주 및 대전 등 노동권익센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초기 비정규직지원센터 모델에서 최근에는 노동권익센터나 세부 센터나 기관(감정노동센터, 이동노동자 쉼터, 상담소 등)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Ⅲ. 국내 지방정부 노동자 지원 중간조직 실태와 특징⁶⁾

1. 지방정부 노동자 지원센터 일반 현황

2019년 6월 기준으로 지방정부에서 직영 혹은 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노동자 지원센터는 약 34개로 파악되며, 광역보다는 기초지역 센터들이 상대적으로 일찍 만들어졌다. 광역 센터 설립 시기는 2014년부터이고, 기초지자체 센터 설립 시기는 2012년부터다. 지방정부 대부분 민간위탁 센터이며, 1-2곳을 제외하고 조례에 근거하여 평균 약 3년(2.8년 : 노동센터 3년, 비정규센터 2.7년) 동안 위탁운영되며, 평가 등을 통해 위탁 혹은 재위탁 과정을 거친다.

현재 다수의 노동자 지원 조직(센터) 거의 다수는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 및 협의회 등에서 지방정부 위탁사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노총(제주 비정규센터, 경남 비정규센터, 경북 포항비정규센터), 시민사회단체(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 성동노동복지센터, 강서노동복지센터, 경남, 서울 양천노동복지센터, 경남 여성비정규직센터 등) 등에서 수탁·운영하는 곳도 있다.

[표6] 주요 노동자 지원조직 '센터' 지역별 현황(2019년 6월 기준)

광역	지역	기관센터	기관 현황			
			설립 년도	수탁 운영기관	위탁 기간(년)	부서 팀 수
서울	서울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한국비정규노동센터	3	6
	성동	성동근로자복지센터	2011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2	1
	서대문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2011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2.5	2
	구로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2012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3	1
	노원	노원노동복지센터	2012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구협의회	2	4
	성북구	서울노동권익센터	2017	서울일반노동조합	2.5	1
	강서구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2017	강서양천민중의 집	3	1
	관악구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2017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악구지부	3	1
	광진구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2017	민주노총 서울본부 광진구지부	3	1
	양천구	양천구 노동복지센터(정식개소 2019)	2018	재단법인 피플	3	1
광주	광주	광주노동센터	2013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6	1

6) 본 자료는 2019년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용득 의원실) 요청자료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김종진)에서 노동포럼(141차) 발표를 위해 분석한 것이다.

광역	지역	기관센터	기관 현황			
			설립 년도	수탁 운영기관	위탁 기간(년)	부서 팀 수
	광주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2013	광주비정규직센터	6	1
대전	광주	대전시노동권익센터	2015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3	4
울산	동구	울산 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12	-	-	1
	북구	울산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03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2	1
전남	전남	전라남도 비정규직노동센터	2013	민주노총 전남본부	2	2
충남	아산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2014	민주노총 아산시위원회	3	1
	서산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17	민주노총 서산시위원회	3	1
	당진	당진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17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3	1
경남	경남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15	한국노총 경남본부	2	3
	경남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18	민주노총 경남본부	2	3
	경남	경남 여성비정규직지원센터	2015	(사)경남여성일과미래창조	2	1
	사천시	사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14	민주노총 사천시지부	2	1
	거제시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17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센터	2	1
	양산시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15	민주노총 양산시지부	3	1
경북	포항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2018	한국노총 포항지역지부	3	1
제주	제주	제주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17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3	3

2. 지방정부 노동자 지원조직 조직 현황

주요 노동자 지원조직(센터)은 2015년부터 개설·운영(광역 2015년: 노동센터 2014년, 비정규센터 2015년, 기초 2014년 : 노동센터 2015년, 비정규센터 2014년)되고 있다. 노동자 지원조직(센터) 내 부서는 평균 4.2개(노동센터 : 2개, 비정규센터 1.4개)이며, 광역(2.6개 : 노동센터 3.6개, 비정규센터 2.1개)이 기초(1.2개: 노동센터 1.4개, 비정규센터 1개)보다 다소 많다. 노동자 지원조직 인력 현황은 평균 4.2명(노동센터 6명, 비정규센터 2.8명)이며, 광역(6.7명 : 노동센터 11.6명, 비정규센터 4.3명), 기초(3명 : 노동센터 4.1명, 비정규센터 1.8명)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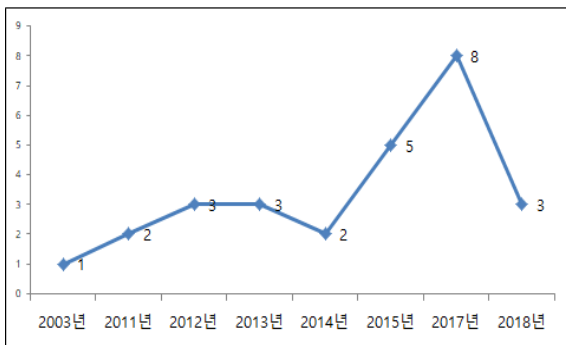
[표7] 주요 지역 노동자 지원조직 기초 현황 - 유형별(2019년 6월 기준)

지역 및 센터유형	기관 현황		조직 현황		월 임금 총액(단위: 원)			
	시작 년도	위탁기간 (년)	인원	부서팀수	1년차 직원	전문직	팀장 부서장	
광역	1 노동센터	2014	4.0	11.6	3.6	2,283,540	3,075,100	3,125,803
	2 비정규센터	2015	2.8	4.3	2.1	2,050,171	2,600,299	2,919,400
	계	2015	3.2	6.7	2.6	2,137,684	2,695,259	2,996,801
기초	1 노동센터	2015	2.6	4.1	1.4	2,220,470	2,310,175	3,535,344
	2 비정규센터	2014	2.6	1.8	1.0	2,605,410	2,887,050	2,469,570
	계	2014	2.6	3.0	1.2	2,357,948	2,598,612	3,154,710
전체	1 노동센터	2015	3.0	6.0	2.0	2,236,238	2,463,160	3,432,959
	2 비정규센터	2015	2.7	2.8	1.4	2,327,790	2,743,674	2,694,485
	계	2015	2.8	4.2	1.7	2,277,852	2,635,784	3,097,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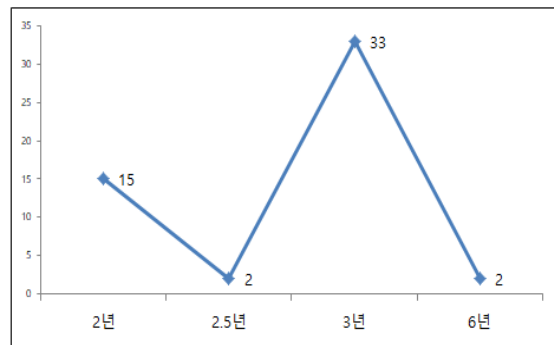
* 주 : 1) 서울시 청년센터 중 지역별 센터인 청년활동지원센터(33명), 청년허브(22명), 무중력지대(8개) 1개 기관에는 평균 4명(매니저 4명, 뉴딜일자리 1명)의 인력이 배치 되어있음.
 2) 서울시 25개 자치구 사회복지시설 1개 시설 당 평균 인원은 42.1명(정규직 18, 무기계약 6.2, 비정규 10.9)의 인력이 배치 되어있음. 청소년수련관 1개 시설 당 평균 인원은 40.8명(정규직 17.9, 무기계약 6.7, 비정규 16)의 인력이 배치 되어있음.

[그림1] 주요 지역 노동자 지원조직 설립 시기 및 위탁기간(2019년 6월 기준)

a) 노동자 지원조직 설립시기(개수)



b) 노동자 지원조직 위탁기간(개수)



[표8] 주요 지역 노동자 지원조직 기초 현황 - 권역별(2019년 6월 기준)

행정지역 및 센터	기관 현황		조직 현황		월 임금 총액(단위: 원)			
	시작 년도	위탁 기간	인원	부서 팀 수	1년차	전문직	부서장	
전체	2015	2.8	4.3	1.7	2,309,671	2,635,784	3,097,289	
광역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3.0	21.0	6.0	2,243,720		3,073,410
	광주노동센터	2013	6.0	7.0	1.0	2,629,900	3,075,100	4,054,000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	2013	6.0	6.0	1.0	2,615,553	3,060,194	4,037,000
	대전노동권익센터	2015	3.0	7.0	4.0	1,977,000		2,250,000
	전남 비정규직지원센터	2013	2.0	5.0	2.0	2,092,000	3,095,000	3,470,000
	경남 비정규직지원센터(한)	2015	2.0	3.0	3.0	1,746,000	1,746,000	
	경남 비정규직지원센터(민)	2018	2.0	3.0	3.0	1,770,000		1,770,000
	경남 여성비정규직 지원센터	2015	2.0	2.0	1.0			1,820,000
	제주 비정규직지원센터	2017	3.0	7.0	3.0	2,022,730	2,500,000	3,500,000
	계	2014	3.2	6.8	2.7	2,137,684	2,695,259	2,996,801
기초	서울 성동노동복지센터	2011	2.0	4.0	1.0	2,160,932	2,160,932	3,819,968
	서울 서대문노동복지센터	2011	2.5	4.0	2.0	2,105,766		2,666,000
	서울 구로노동복지센터	2012	3.0	4.0	1.0	2,105,766		2,720,060
	서울 노원노동복지센터	2012	2.0	5.0	4.0	2,432,370	2,591,700	3,165,544
	서울 성북노동복지센터	2017	2.5	4.0	1.0	2,105,766	2,122,000	4,390,000
	서울 강서노동복지센터	2017	3.0	4.0	1.0	2,360,000		3,600,000
	서울 관악노동복지센터	2017	3.0	4.0	1.0	2,502,100		4,430,630
	서울 광진노동복지센터	2017	3.0	4.0	1.0	2,105,766		3,471,788
	서울 양천노동복지센터	2018	3.0	4.0	1.0	2,105,766	2,366,066	3,554,105
	울산 동구비정규직지원센터	2012		2.0	1.0	4,200,000	3,500,000	3,500,000
	울산 북구비정규직지원센터	2003	2.0	2.0	1.0	2,300,000	3,134,000	
	충남 아산비정규직지원센터	2014	3.0	3.0	1.0	1,977,050		2,530,300
	충남 서산비정규직지원센터	2017	3.0	3.0	1.0	2,300,000	2,730,000	
	충남 당진비정규직지원센터	2017	3.0	2.0	1.0	1,977,050	2,184,200	2,239,000
	경남 사천비정규직지원센터	2014	2.0	1.0	1.0			1,528,000
	경남 거제비정규직지원센터	2017	2.0	2.0	1.0	2,450,000		2,550,550
	경남 양산비정규직지원센터	2015	3.0	1.0	1.0	2,800,000		
	경북 포항비정규직지원센터	2018	3.0	1.0	1.0			
	계	2014	2.6	3.0	1.2	2,407,949	2,598,612	3,154,710

3. 지방정부 노동자 지원조직 예산 및 사업 영역 현황

2018년 12월말 결산 기준으로 주요 노동자 지원조직(센터) 예산은 평균 3억7천만원(노동센터 5억6천만원, 비정규센터 2억1천만원)이며, 광역 6억5천만원(노동센터 11억8천만원, 비정규센터 3억8천만원), 기초 2억1천만원(노동센터 3억3천만원 비정규센터 9천1백만원)으로 확인된다. 각 노동자 지원조직 전체 예산(결산) 대비 인건비는 58.1%(노동센터 49.2%, 비정규센터 65.6%), 광역 52.8%(노동센터 35.5%, 비정규센터 61.5%), 기초 60.8%(노동센터 53.8%, 비정규센터 68.7%)이고, 사업비는 34.8%(노동센터 44.7%, 비정규센터 25.6%), 광역(36.5% : 노동센터 51.3%, 비정규센터 29.1%), 기초(33.8% : 노동센터 42.5%, 비정규센터 22.6%)로 확인된다.

[표9] 주요 지역 노동자 지원조직 예산 현황 - 유형별('18년 12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지역 및 센터 유형	예산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광역	1 노동센터	1180.7	367.3	652.7	159.7
	2 비정규센터	385.0	240.0	117.9	26.8
	계	650.2	282.4	296.1	71.1
기초	1 노동센터	332.4	158.6	160.4	13.4
	2 비정규센터	91.4	60.0	24.6	9.6
	계	211.9	109.3	97.0	11.5
전체	1 노동센터	563.7	215.5	294.6	53.3
	2 비정규센터	217.3	137.1	67.6	16.9
	계	369.7	171.6	171.7	32.9

[표10] 주요 지역 노동자 지원조직 예산 비율(%) - 유형별('18년 12월말 기준)

지역 센터유형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기타	
광역	1 노동센터	35.50	51.37	13.00	
	2 비정규센터	61.53	29.19	9.13	.20
	계	52.86	36.58	10.42	.20
기초	1 노동센터	53.89	42.56	3.78	
	2 비정규센터	68.72	22.65	11.59	.00
	계	60.87	33.85	7.45	.00
전체	1 노동센터	49.29	44.76	6.08	
	2 비정규센터	65.64	25.67	10.53	.13
	계	58.10	34.83	8.48	.13

[그림3] 주요 지역 노동자 지원조직 예산 '사업비' 35% 미만 센터 현황



[표11] 주요 지역 노동자 지원조직 사업영역 예산 비율(%) - 유형별('18년 12월말 기준)

지역 및 센터유형	연구조사	노동법률상담	홍보기획	대외사업	기타	
광역	1 노동센터	5.4	7.2	5.8	10.4	60.3
	2 비정규센터	17.1	13.7	17.0	8.1	11.9
	계	14.2	11.9	14.2	8.6	25.7
기초	1 노동센터	9.7	20.5	15.7	5.5	12.4
	2 비정규센터	19.4	35.6	19.1	31.0	25.2
	계	12.9	27.0	17.2	12.4	18.2
전체	1 노동센터	8.8	17.9	13.7	6.0	24.4
	2 비정규센터	18.0	25.7	18.1	17.9	18.5
	계	13.4	21.9	16.1	11.2	21.1

주요 노동자 지원조직(센터) 2018년 12월말 결산 기준 사업비는 노동법률상담 21.9%, 홍보기획 16.1%, 연구조사 13.4%, 대외사업 11.2% 등의 순이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은 28억원으로 광역 및 노동센터 중 가장 많은 규모이고, 서울 성동노동복지센터는 기초 및 비정규직센터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주요 센터들의 사업 내용은 대체로 △정책연구(실태조사), △노동법률지원 및 상담, △교육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권익센터나 비정규직지원센터 사업 영역별 내용을 보면 정책연구·실태조사는 외부 연구위탁이 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전문성, 연계성)가 있고, 연구주제의 편차도 매우 크다. 노동법률지원과 상담과 교육은 개별구제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다른 효과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2019년 주요 사업영역

○ 정책연구사업 프리랜서 권익보호·노동자 조합지원센터 역할 및 차별화·귀금속 세공노동자 건강실태 연구 등	○ 교육홍보사업 노동교육 인프라 운영관리, 서울노동아카데미, 캠페인 콘텐츠 제작 등
○ 법률지원사업 상시 노동상담,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노동상담 사례집 발간 등	○ 기획협력사업 노동복지기반구축,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협력, 노조 설립 및 조직화 지원 등

*주 : 컴퓨터운영사업 → '휴' 서울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서울감정노동센터 2019년 주요 사업영역

○ 민간부문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 감정노동 실태조사, 취약종사자 감정노동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감정노동 네트워크 구축, 권역별 감정노동 상담 치유 강화 사업 등	○ 공공부문 감정노동 모범 보호체계 도입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감정노동교육, 공공부문 제도 이행점검 및 경영평가 반영 마련 등
	○ 감정노동 인식개선 감정노동 캠페인, 감정노동 보호 콘텐츠 경진대회, 시민대면광고 등

*주 : 컴퓨터운영사업 → '휴' 서울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안산비정규직지원센터 2018년 주요 사업영역

○정책연구 사업	지자체 감정노동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지자체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조사 스마트허브 공공고용서비스 질적 개선 연구
○노동상담·법률지원사업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사업
○교육사업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률강좌 성공회대학교와 함께하는 안산노동대학
○노동기본권 보호사업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사업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
○감정노동 보호 사업	대형마트 감정노동 인식개선 공동캠페인, 요양보호사 감정노동 심리치유 프로그램 비정규직 노동자 감정노동 치유 상담
○생활안정·문화활성화	비정규직 취약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문화 활성화 사업

전주비정규직지원센터 2018년 주요 사업영역

○상담사업	노동상담
○노동인권 교육사업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보건의료노동자 노동인권 교육 민간위탁사업장 및 선로공 노동인권 교육
○정책사업	함께 살자 대토론회
○인식개선 사업	좋은 알바찾기 탐사단, 정책 및 캠페인 사업 전화선로공 용역 실태조사
○센터 역량강화사업	아파트관리원 노동환경 처우개선 사업

[참조] 지역 비정규지원센터 주요 현황 비교(2018)

		울산 북구비정규센터	경기 안산비정규센터	전북 전주비정규센터
환경	설립 배경	지자체장+시의원+민주노총 주도	시민단체 주도	시의원 주도
내부 기관 현황	위탁 기간	민간위탁(2년)	민간위탁(3년)	민간위탁(3년)
	조직 구성	2명(사무국장, 상담실장)	9명(센터장, 정책팀 4명, 기획팀 4명 등)	4명(센터장, 상담실장, 정책국장, 사무국장)
	상근자 역량	-노조활동경험과 지식 보유 -시민활동 경험	-시민단체 경험 -노조활동 경험과 지식 -공인노무사 자격증 보유	-노조활동 경험과 지식 보유 -일반기업 근무 경험 -공인노무사 자격증 보유
	지자체 지원금	-일괄지급 -8천만 원(인건비로 활용)	-세부항목별 지급 -총 4억 2천만 원 (인건비 2억4천만 원, 사업비 1억 8천만 원)	-일괄지급 -총 1억 9천만 원(인건비 1억2천만 원, 사업비 7천만 원)
	기타 지원금	-민주노총(4백만 원) -현대차노조(1천5백만 원)	-없음	- 노동네트워크(270만 원)
	센터 위치	-오크벨리복지센터 -높은 접근성	-상하수도사업소 -높은 접근성	-공설운동장 -낮은 접근성
	지역자원 활용	-노총 -시민단체 -정부기관(노발재단)	-노총, 대학, 시민단체	-대학, 시민단체
활동 사업	참여 대상	-미조직 노동자 -일반시민 -학생	-미조직 노동자 (대기업 하청 노동자) -일반시민 -학생	-미조직 노동자 -일반시민 -학생
	사업 내용	-노동인권지킴이 -취약계층노동자지원사업 -취약계층노동자건강지원사업 -노동인권 및 법률교육(노동상담)	-노동조건개선사업 -청소년노동인권교육 -노동대학 -노동법률강좌 -소규모사업장지원 -생활지원사업	-상담사업 -노동인권 교육사업 -정책사업 -노동자 인식개선사업 -센터 역량강화사업
향후 과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비정규지원센터 용어 변경 -전담인력 배치 -센터 자율성 부여 -위탁기간 연장 (2년 → 5년)	-비정규지원센터 용어 변경 -센터 자율성 부여 -지자체 노동정책수립 -위탁기간 연장(3년 → 5년) -전담인력 장기 근무	-지자체 노동정책수립 -전담인력 장기 근무 -위탁기간 연장(3년 → 5년) -센터 접근성 강화

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주환·우상범, 2019) 재구성.

[표12] 주요 지역 노동자 지원조직 예산 현황 - 권역별('18년 12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행정지역	예산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전체	369.7	171.6	171.7	32.9	
광역	서울노동권익센터	2803.0	824.0	1593.0	386.0
	광주노동센터	499.0	177.0	255.0	65.0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	352.0	172.0	121.0	57.0
	대전노동권익센터	240.0	101.0	110.0	28.0
	전남 비정규직지원센터	200.0	153.0	21.0	26.0
	경남 비정규직지원센터(한)	1000.0	785.0	210.0	5.0
	경남 비정규직지원센터(민)	100.0	75.8	19.1	4.7
	경남 여성비정규직 지원센터	50.0	26.0	19.0	5.0
	제주 비정규직지원센터	608.0	228.0	317.0	63.0
	계	650.2	282.4	296.1	71.1
기초	서울 성동노동복지센터	349.0	163.0	175.0	11.0
	서울 서대문노동복지센터	341.0	156.0	156.0	29.0
	서울 구로노동복지센터	322.0	163.0	150.0	9.0
	서울 노원노동복지센터	353.0	191.0	153.0	9.0
	서울 성북노동복지센터	323.0	149.0	162.0	12.0
	서울 강서노동복지센터	323.0	152.0	159.0	12.0
	서울 관악노동복지센터	324.0	149.0	162.0	13.0
	서울 광진노동복지센터	324.0	146.0	166.0	12.0
	울산 동구비정규직지원센터	145.0	102.0	26.0	15.0
	울산 북구비정규직지원센터	97.0	76.0	17.0	4.0
	충남 아산비정규직지원센터	170.0	114.0	42.0	14.0
	충남 당진비정규직지원센터	156.0	75.0	59.0	21.0
	경남 사천비정규직지원센터	30.0	20.6	4.0	5.4
	경남 거제비정규직지원센터	90.0	58.0	21.0	11.0
	경남 양산비정규직지원센터	29.0	24.5		4.5
	경북 포항비정규직지원센터	14.5	10.0	3.0	1.5
	계	211.9	109.3	97.0	11.5

[표13] 주요 지역 노동자 지원조직 예산 비율(%) - 유형별('18년 12월말 기준)

행정지역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합계		58.10	34.83	8.48	
광역시	서울노동권익센터	29.00	57.00	14.00	
	광주노동센터	35.50	51.10	13.00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	48.90	34.40	16.20	
	대전노동권익센터	42.00	46.00	12.00	
	전남 비정규직지원센터	76.50	10.50	13.00	
	경남 비정규직지원센터(한)	78.50	21.00	.50	
	경남 비정규직지원센터(민)	75.80	19.10	4.70	
	경남 여성비정규직 지원센터	52.00	38.00	10.00	
	제주 비정규직지원센터	37.50	52.14	10.36	
	계		52.86	36.58	10.42
기초	서울 성동노동복지센터	50.00	47.00	3.00	
	서울 서대문노동복지센터	46.00	46.00	9.00	
	서울 구로노동복지센터	51.00	47.00	3.00	
	서울 노원노동복지센터	54.00	43.00	3.00	
	서울 성북노동복지센터	46.00	50.00	4.00	
	서울 강서노동복지센터	47.00	49.00	4.00	
	서울 관악노동복지센터	46.00	50.00	4.00	
	서울 광진노동복지센터	45.00	51.00	4.00	
	서울 양천노동복지센터	100.0	-	-	
	울산 동구비정규직지원센터	71.00	19.00	11.00	
	울산 북구비정규직지원센터	78.00	18.00	4.00	
	충남 아산비정규직지원센터	67.00	25.00	8.00	
	충남 당진비정규직지원센터	48.07	38.22	13.69	
	경남 사천비정규직지원센터	68.70	13.30	18.00	
	경남 거제비정규직지원센터	65.00	23.00	12.00	
	경남 양산비정규직지원센터	84.00		16.00	
	경북 포항비정규직지원센터	68.00	22.00	10.00	
	계		60.87	33.85	7.45

[표14] 주요 지역 노동자 지원조직 사업영역 현황 비율(%) - 권역별(2018년 12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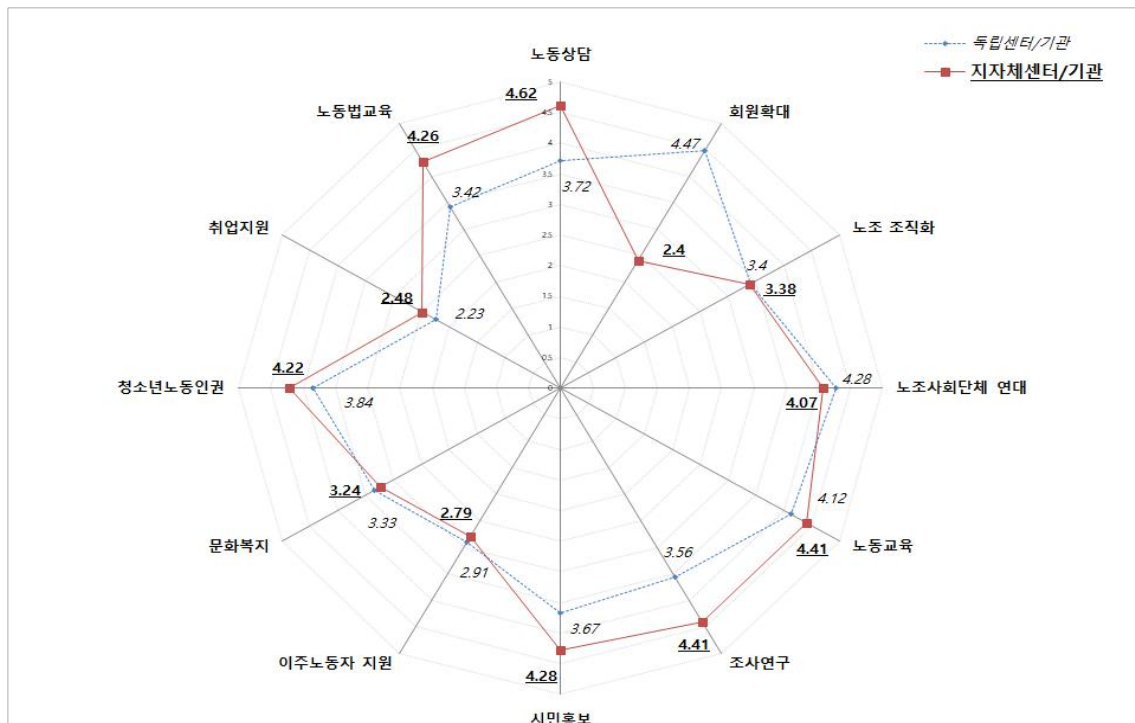
지역 및 행정지역	연구조사	노동법률 상담	홍보기획	대의사업	기타
전체	13.4	21.9	16.1	11.2	21.1
서울노동권익센터	8.9	9.3	10.9	10.4	60.5*
광주노동센터	1.9	5.0	.7		60.0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	27.2	1.6	10.7		22.3
전남 비정규직지원센터	5.0	50.0	10.0		5.0
광역시					
경남 비정규직지원센터(한)	4.3	6.2	10.0	15.0	20.0
경남 비정규직지원센터(민)	5.0	9.0	26.0	1.0	2.5
경남 여성비정규직 지원센터	20.0		25.0	3.0	
제주 비정규직지원센터	41.0	1.9	20.5	13.6	9.5
계	14.2	11.9	14.2	8.6	25.7
기초					
서울 성동노동복지센터	10.6	26.1	22.9	20.6	
서울 서대문노동복지센터	9.9	20.1	39.8	.1	10.0
서울 구로노동복지센터	10.0	21.2	7.9	1.0	.3
서울 노원노동복지센터	4.7	12.6	3.6	.7	21.9
서울 성북노동복지센터	10.0	20.0	15.0	15.0	
서울 강서노동복지센터	14.0	23.0	10.0	2.0	4.0
서울 관악노동복지센터	9.0	19.0	15.0	1.0	17.0
서울 광진노동복지센터	9.1	22.4	11.5	3.5	21.1
울산 동구비정규직지원센터		20.0			12.0
울산 북구비정규직지원센터			29.0	71.0	
충남 아산비정규직지원센터	31.0	24.0	11.0		
충남 당진비정규직지원센터	15.4	22.0	7.1	5.0	1.0
경남 사천비정규직지원센터	1.0	68.5	12.5		
경남 거제비정규직지원센터	30.0	10.0	36.0	17.0	1.0
경남 양산비정규직지원센터					100.0
경북 포항비정규직지원센터		69.0	19.0		12.0
계	12.9	27.0	17.2	12.4	18.2

주 : 서울노동권익센터 전체 예산 중 '기타'에서 노동자 쉼터 5개(대리, 퓌 등) 포함.

4. 지방정부 센터 활동가 의식과 지향

한편 각 지역 노동자 지원센터들은 주로 노동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교육 및 상담,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주요 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자료는 보면 센터 주된 사업영역은 △정책(4.67점), △시민홍보(4.56점), △노동자 교육(4.33점), △노동상담(4점), △연대협력사업(4점), △노조 조직화(3.75점), △비정규 회원 확대(3.33점), △이주노동자 지원(2.57점) 순이었다([그림2]). 또한 주요 사업성과는 △체불임금 등 노동상담(4.25점), △실태조사, 정책연구(4점), △노동자 교육(3.92점), △시민 대상 비정규 문제의 중요성 홍보(3.75점), △지역 비정규 노동자의 어려움 대변(3.67점), △활동가 재생산(3.18점), △지역 비정규 현안 문제 해결(3.17점), △센터 회원확대(2.6점) 순이었다([그림3]).

[그림2] 주요 지역 비정규직 및 노동센터 사업 영역 중요도(2018, 단위: 1점~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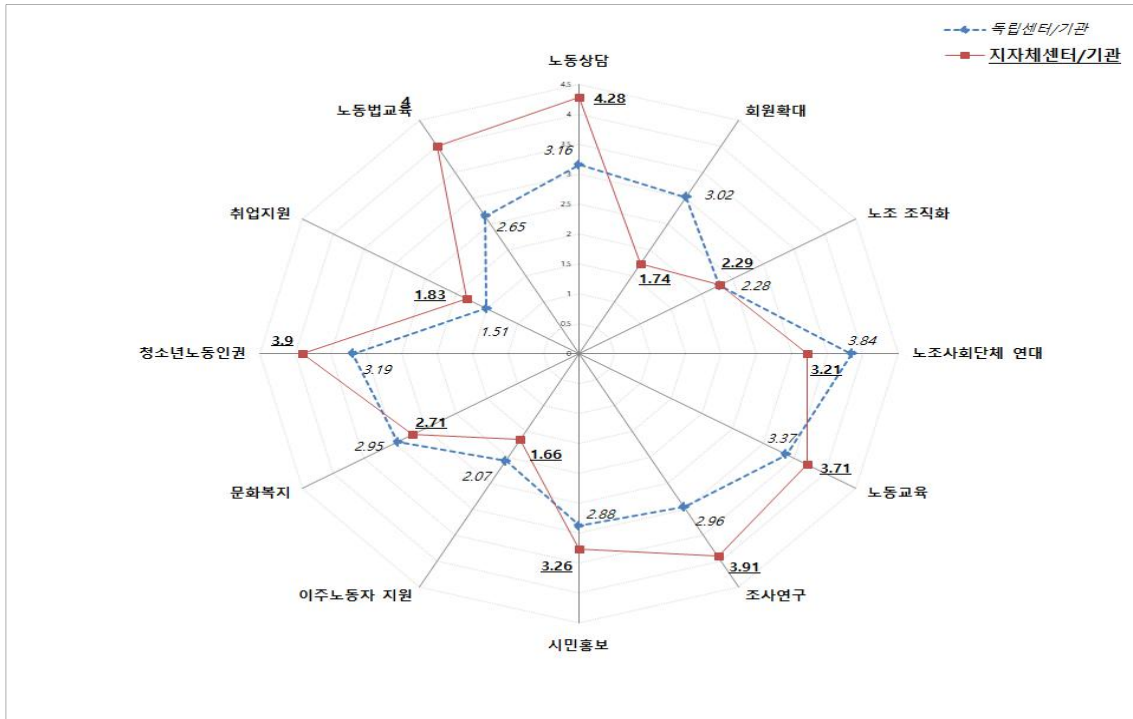


* 주 :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 변수 계수화 처리
 * 자료: 노성철·정홍준·이철(2018) 42개 노동 관련 센터 담당자 의견조사 원자료 필자 재구성.

지방정부 위탁 센터들은 민간위탁이라는 한계(정책영역, 수단, 자원)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기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대표적으로 지역 내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정책의 밑바탕이 되는 자료들을 축적했고, 해당 내용이 지방정부 사업에 반영된 곳들도 있다. 물론 성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요 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센터 운영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자체와 갈등(3.56점), △정책 역량 한계(3.33점), △지역 무관심(2.89점),

△재정 한계(2.78점), △회원 확대 한계(2.44점), △불협화음(1.78점), △내부 갈등(1.57점)이 꼽혔다.

[그림3] 주요 지역 비정규직 및 노동센터 사업성과(2018, 단위: 1점~5점)



* 주 : 5점 척도(전혀 성과적이지 않다 =1부터 매우 성과적이다=5) 변수 계수화 처리
 * 자료: 노성철·정홍준·이철(2018) 42개 노동 관련 센터 담당자 의견조사 원자료 필자 재구성.

V. 맺음말 - 토론과 논의

그동안 학계나 노동조합에서 ‘지역사회의 노동정책 역할’을 모색한지 오래되었다. 양대노동 산하조직이나 가맹조직의 지역본부들은 지역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꾸준히 모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방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노조의 참여와 개입은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겨우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참여 혹은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된 정도였다. 이제는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참여와 개입 그리고 공동운영이라는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부문은 민간영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이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 활용성이 높다.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기본방향은 ①세계인권선언과 ILO 및 헌법의 노동기본권(32조, 33조, 34조), ②ILO, OECD, EU 등에서 사용되는 ‘좋은 일자리’ 기준, ③보편적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보는 취약계층 노동자 기준, ④지자체 노동정책의 수준별 방향을 준거로 이야기되고 있다(김종진, 2016ab, 2018). 물론 정책을 수립할 때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면서 △노동정책 지원 조례 제정, △노동정책 비전 및 영역의제별 과제 수립, △노동행정 전담조직의 설치와 운영(노동자지원조직), 노동행정의 거버넌스 운영이라는 4가지 기본 틀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노동정책이 제도화된 곳은 1~2곳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수준의 조직된 노동정책의 파트너십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 지방정부의 공공 및 노동행정에서 노동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지방정부 노동정책이 지역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공공, 민간)과 일자리 및 고용서비스 개입 전략을 모색하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현재의 지방정부(특히 기초)는 권한의 한계로 지역 산업정책 개입력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며, 그나마 고용차원(재정지원 일자리)의 제한적 수준에서 노동시장(고용, 일자리)에 개입할 수 있는 정도다. 그렇기에 지역노동시장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 구조에 대한 개입 전략을 모색했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공공부문 내 고용안정성을 위한 정규직 전환이나 민간 위탁 처우개선이나, 최저임금의 지역수준을 높이는 ‘생활임금’이 그나마 정책이 100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노동권익센터’나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 및 과제를 모색하는 것은 현 시기 중요한 문제다. 특히 촛불항쟁 이후 중앙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노동정책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 노동센터 방향 설정은 미조직·취약노동의 보편적 노동기본권과 인식 개선 사업들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내 공공행정 조직에 노동정책 수립과 조직 신설하고, 그 바탕 하에 각 센터들을 운영하는 유기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럴 때 센터는 실효적인 사업 영역(지역 공공부문 내 민간위탁)과 지역 특화적인 의제(공단지역, IT 지역, 유통서비스지역, 아르바이트 밀집지역 등)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문제와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 관련 의제들이 다. 기존 공통적 사업(실태조사, 교육상담 등) 영역도 이런 분야에 타겟팅할 필요가 있다.

* 지역별 노동센터와 비정규센터의 적극적 지역사회 개입 전략 모색 (* 공공민간위탁, 보조금 시설)

* 지역별 노동센터와 비정규센터의 타겟팅 대상, 의제의 지역 모델 개발 (* 표준 모델에서 특화 모델로)

둘째,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2000년대 초중반)의 비정규직센터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변화하여 센터 기능과 범위 확대(비정규직센터의 노동권익센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비정규직은 기간제나 파견용역에 국한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춘 센터의 역할 변화도 필요하다. 더불어 센터 기능이 연구조사나 상담(인-바운드)에 있기보다는 지역사회와 맞물린 사업(아웃-바운드) 형태가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센터 기초 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기초 센터는 평균 2억~3억원 정도의 예산과 3~4명 남짓의 인력(최소 6명 이상, 2~3개 팀/부서 必)은 지자체나 단체장들이 정책홍보나 노동조합 등에게 '드러내 보이기' 수준에 불과하고, 센터도 현안 사업이나 회의·행정 업무에 치일 수밖에 없다.⁷⁾

* 지역별 노동센터와 비정규센터 인력 임금 격차 해소 모색(*1년차 230만원 수준, 최소 6인 2팀/4.5억원)

* 지역별 노동센터와 비정규센터 예산 대비 사업비 35% 실현 목표(*조사연구, 상담교육, 홍보기획 등)

셋째, 지역 내 광역과 기초 센터들의 유기적 활동과 역할 조정과 권역별 사업의 배치, 통일화 사업 등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양한 센터들이 시기별 특성에 따라 설립되고 있으나 광역 및 권역별 노동문제와 연동된 사업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다. 때문에 광역센터 역할 정립이 필요하고, 기초센터와 어떤 유기적 사업을 할 것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광역은 정책 및 연구조사(통계자료, 설문조사 등), 데이터 구축(빅 데이터, 상담db 사례 공유), 지역을 벗어난 노동문제 등에 조금 더 역할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역할 수행과 관련 학술조직(학회, 대학, 연구집단)과의 연계성 문제도 광역센터가 기초와 연결해주는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

* 지역별 노동센터와 비정규센터 광역-권역별 허브 운영(*조사연구 툴, 상담 사례 등 공유 분석)

* 지역별 노동센터와 비정규센터 연구집단과 네트워킹 모색(*조사연구 및 자문집단 운영 등)

7) 각 지역본부나 노동조합이 지자체에 노동정책 수립이나 정책협약 등을 할 때 구체적이고 세밀한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수십년 동안 입법화를 통해 사회서비스영역(사회복지)와 청소년, 노인, 여성분야는 조례, 인프라(건물), 행정조직은 물론 센터 인력이 광역지자체의 경우 최소 30여명 수준이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청년센터에 비해서도 노동센터나 비정규센터는 미약한 수준이다. 이런 현실을 보면 어쩌면 우리 노동운동진영이나 노동조합은 국가(중앙)와의 투쟁과 요구과정에서 미조직 취약노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천적 활동 영역에서 지방정부 개입 전략의 빈 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종진(2016a), 「지자체 노동정책 현황과 과제」, 《노동사회》, 190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종진(2016b), 「외국 지자체 노동정책 사례와 시사점」, 《노동사회》, 191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종진(2018), 「노동의 미래와 유니언시티 - 한국 지방정부의 '유니언시티' 모델 과제」, 『일의 불평등과 유니언시티』, 2018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2018.12.12.), 서울시 일자리정책과&국제노동기구(ILO).
- 김현우·이상훈·장원봉(2006), 『지역사회와 노동운동의 개입전략』,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노성철·정홍준·이철(2018), 「노동운동의 새로운 시도 혹은 제도적 포섭? : 비정규노동센터의 성과와 과제」, 《산업노동연구》, 제24권 2호, 한국산업노동학회.
- 이정봉(2012), 「서울시 노동복지센터의 역할과 전망에 관한 제언」, 《노동사회》, 제165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이정봉(2017),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실태와 향후 과제」, 《이슈페이퍼》, 2017-1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Tattersall, Amanda, "Understanding what makes union-community coalition effective: A framework for analysing union-community relationships", *AIRAAANZ* 2005.
- Tattersall, Amanda, "Union-Community Coalitions and Community Unionism: developing a framework for the role of union-community relationships in union renewal", 2004.

사례발표 1.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 활동과 방향

이철 |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국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141차 노동포럼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 활동과 방향

2019. 07.23.(목) 14:30 ~ 17:0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장

이 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국장)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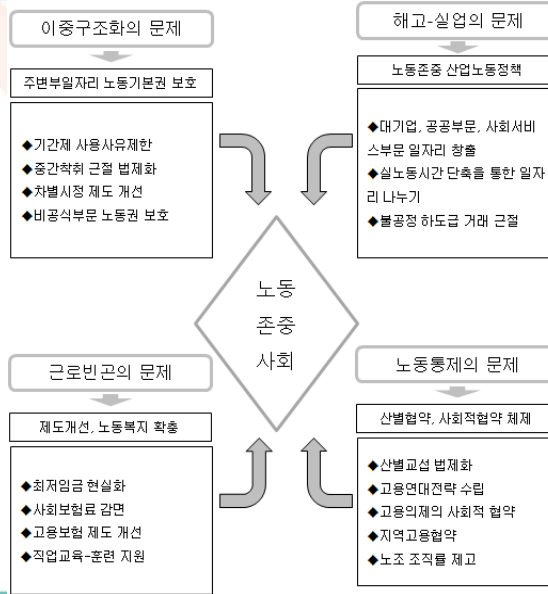
목 차

서울노동권익센터
SEOUL LABOR CENTER

1. 문제의식
2. 서울시 노동정책 개관: 노동정책의 흐름
3.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현황
4. 서울노동권익센터 1단계 사업 성과
5. 서울노동권익센터 2단계 사업의 필요성과 총과 추진계획
6. 2019년도 예산과 사업의 구성
7. 서울노동권익센터 주요 사업과 문제의식
8. 민선 7기 서울시 노동정책 고민과 과제: 추진전략

2

1. 문제의식-노동시장 4대 문제와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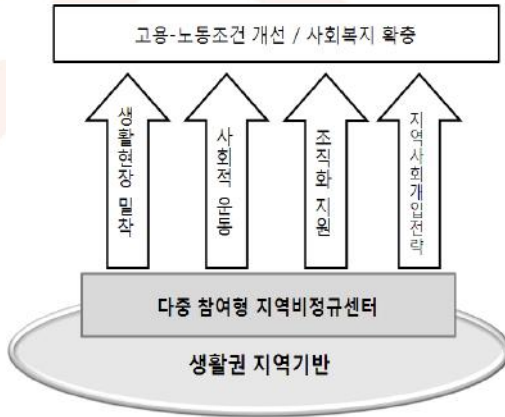
3

1. 문제의식-지역사회에 주목

- 사업장 단위 조직 노동이 근로조건 개선을 이루더라도 사회변화를 이끌지 못한 다는 점
- 초기업단위 노조=산별노조운동은 산업별 단체협약 체결이 쉽지 않을뿐더러, 적용률이 매우 낮음
-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을 뿐더러 전통적 방식의 사업장단위 노조설립이 어려움

조직되어 있지 않은 노동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변부 노동은 '유목노동' 양상을 띠고 있는 데 이들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지역과 이 공간이 당사자 주체역량을 발굴하고 형성하는 첫 단계라는 점, 조직 노동자들 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존중 사회로 변화의 지향을 품고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를 주목

4



〈2017년 전국 54개 단체 조사〉

- 민관협력위탁센터 : 26개소
- 독립센터 : 27개소
- 지자체직영센터 : 1개소
- 산업노동연구 제24권 2호

△ 지역비정규센터의 역할과 과제(문종찬,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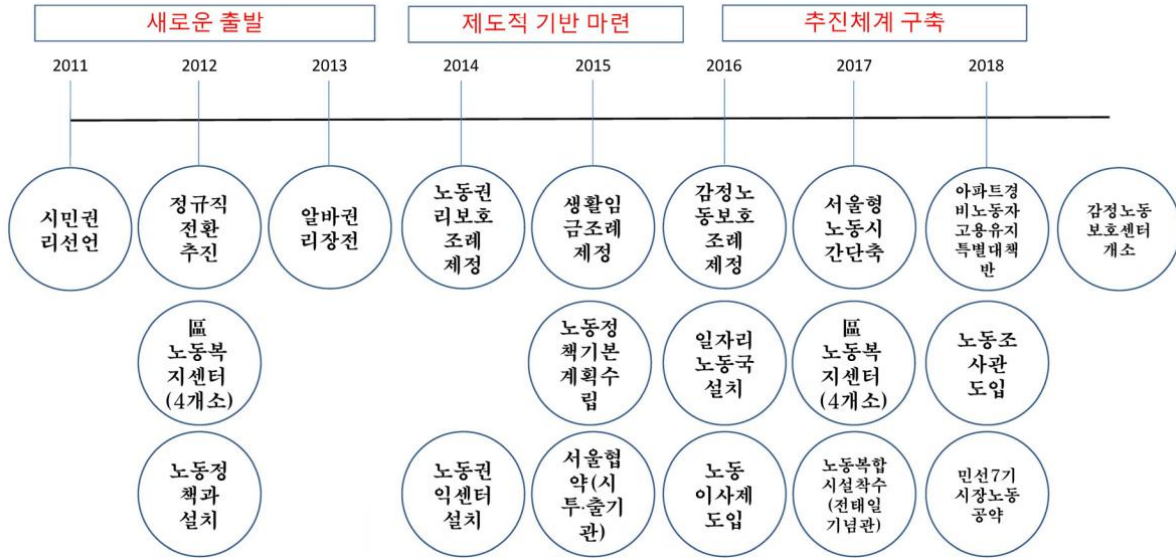
〈토론회〉 2014. 3.25 / 2014. 4. 1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서울시의회 의정포럼, 노원노동복지센터, 매일노동뉴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노동정책은 고용노동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시장관리를 주로 하는 것으로 노동을 비용이 아닌 사람의 문제로 보는 우리의 노동정책으로 봤을 때는 일부분만 행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업무의 지방정부로 이관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정부도 얼마든지 적극적 노동정책(행정)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요지였고,

따라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구단위 노동복지 계획수립 △노동인지적 행정과 자치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 △주민 건강권 보호의 핵심 요소인 노동자 건강권 보호(일과 연관된 건강권) △사회서비스분야에서 협동사회경제 확대를 선순환적인 좋은 일자리 확충 △시장에 맡겨진 교육훈련과 고용지원서비스를 공적영역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지자체가 실현할 수 있는 적극적 노동정책의 사례로 제시

2. 서울시 노동정책 개관: 노동정책의 흐름



7

3.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현황_설립 현황

설립근거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상위법 관계: 근로복지기본법 28조, 지방자치법 144조)

설립목적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과 광역근로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 노동단체와의 허브역할 수행

주요기능

1. 권익보호와 법률지원
2. 연구조사와 전략사업 발굴
3. 교육훈련과 시민홍보
4. 건강 및 산업안전 증진 사업
5. 사업지원과 네트워킹
6.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공동사업 발굴 및 사업방향 조정·지원
7.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추진사업
8. 센터 시설, 비품 등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9. 기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탁기관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조돈문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2000년 창립
- 1차 계약기간: 2014. 12. 8. ~ 2017. 12. 7.
- 2차 계약기간: 2017. 12. 8. ~ 2020. 12. 7.

8

3.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현황_조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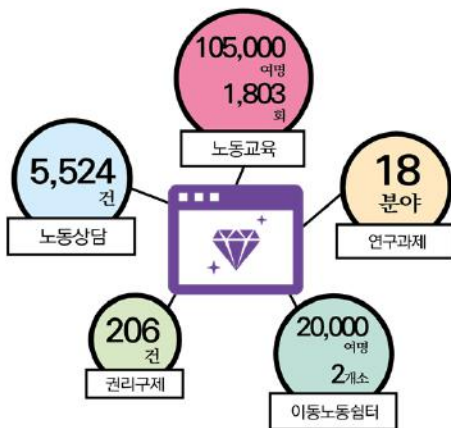
구분	계	센터장	국장	팀장	팀원	비고
정원	22	1	2	6	13	
정원 외	14	휴이동노동자센터 14명 (미디어센터 2명 제외)				



9

4. 서울노동권익센터 1단계 사업 성과

1 노동권의 사각지대 해소 기여



서울시 2017년 제2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총 86.32점 획득 (사업계획집행 수준 우수사에 선정)
- 2017. 8. 31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 민간 협력체계 및 노동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 업무협약 14건 체결
-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결성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참여
- 전국지자체지원노동센터협의회 활성화
- 자치구노동복지센터 협의체 구성
- 법률/교육/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지역기반 구축 공모사업과 민간협력 사업모델 개발

10

5. 서울노동권익센터 2단계 사업의 필요성과 총괄 추진계획



민관협력 모델 확산과 광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 취약계층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모델 확산 및 광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필요



노동허브기관과 중간지원조직 위상 강화

- 25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와 거버넌스를 구축
- 노동복지 허브와 중간지원조직 위상을 강화하고 재정립하기 위한 사업 전개 필요

11

5. 서울노동권익센터 2단계 사업의 필요성과 총괄 추진계획

비전	취약계층 권익옹호의 광역허브 기능 구축과 노동거버넌스 모델 선도		
3대 목표	노동기본권 향상과 복지 증진 취약노동계층 노동전문화 확산과 노동중증도시 구축 노동권의 증진 인프라와 네트워크 확대		
연차별 목표	2018 1단계 성과의 확산	2019 광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2020 환경변화와 제도개선
연차별 4대 미션과 주요 사업	① 권익보호와 지원·지지 - 상담-권리구제 거점 확산과 전문화 - 7차성 공익노동법지원단 구성 - 7차성 이통노동지원단 구성 - 여성돌봄노동 보호와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연구 ② 노동복지기반 구축 - 노동복지상담 시범사업 추진 - 지역노동기반 구축 지원 사업 ③ 노동중증과 사회적 대화 기반조성 - 서울노동야카데미 교육 모듈화 -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위한 환경 조성 ④ 노동역량/거버넌스 활성화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협력체계 - 노조 단체 역량강화 교육	① 권익보호와 지원·지지 - 상담-권리구제 시스템 개선 - 공익노동법지원단 사업 체계화 - 이통노동지원단 역할 강화와 업무 가능 확대 - 청년일자리 추진시간 노동자 노동권 보호 연구 ② 노동복지기반 구축 - 노동복지상담 사업 모델 구축 - 지역노동기반 구축 지원 사업 ③ 노동중증과 사회적 대화 기반조성 - 서울노동야카데미 브랜드화 - 사회적 의제 연구와 취약계층 권익보호 사회적 대화 추진 ④ 노동역량/거버넌스 활성화 - 공공기관 및 전국노동복지센터 협력사업 확대 - 노조 단체 역량강화 교육 확대	① 권익보호와 지원·지지 - 권익 옹호와 지지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원사업단의 독립적 역할과 활동 - 당사자의 제도와 정책 개선 요구 - 노인일자리 사업의 비편식 분석과 노인빈곤문제 해법 연구 ② 노동복지기반 구축 - 노동복지상담 관련 제도 개선 - 지역노동복지기반 확대 ③ 노동중증과 사회적 대화 기반조성 - 서울노동야카데미 안정화와 노동대학으로의 발전 - 취약노동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추진 ④ 노동역량/거버넌스 활성화 - 공공기관 및 전국노동복지센터 협력사업 확대 - 노조 단체 역량강화 교육 확대
전략	환경조성 전략 - 시민대상 홍보 및 생명향 직접 소통 통한 노동 시민의식 변화 - 노동중증도시 구축	선택과 집중 전략 - 지역, 업종, 직종 선택 및 역량 집중 - 현장 기반 사업모델 발굴과 실질적 변화 유도	주체형성 전략 - 취약계층 역량 강화 - 시민사회-주민공동체 연계체계 구축 - 지역노동복지서비스 기반 조성확대

12

6. 2019년도 예산과 사업의 구성

단위: 천원

구분	소요예산	
계	3,027,231	
사업비 총계	1,815,392	
정책연구사업	162,566	
법률지원사업	167,986	
교육홍보사업	200,093	
기획협력사업	193,745	
휴서울노동자쉼터운영	1,091,002	
운영비 총계	1,211,839	
운영비	인건비	909,969
	4대보험	86,338
	퇴직적립	75,830
	관리운영비	139,702

13

6. 2019년도 예산과 사업의 구성

정책연구 사업	프리랜서 권익보호 정책방안 연구	30,765	상반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역할과 차별화 방안 연구	30,765	하반기
	영세사업장 노동자 미조직화 실태와 조직화 지원방안 연구	30,765	상반기
	서울의 2단계 노동기본계획 방향과 과제	26,630	하반기
	서울지역 귀금속 세공노동자 안전과 건강실태 연구	30,365	상반기
	동향과 이슈 발간	3,530	연중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운영	9,746	연중
법률지원 사업	상시 노동상담	16,500	연중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지원	84,520	연중
	청(소)년 노동권 법률지원	13,550	연중
	노동상담DB 리뉴얼	23,930	상반기
	노동상담 사례집 발간	15,606	상반기
	법률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3,660	연중
	집단적 노사관계 법률지원	10,220	연중

14

6. 2019년도 예산과 사업의 구성

교육홍보 사업	노동교육 인프라 운영관리	31,395	연중
	서울노동아카데미	77,140	연중
	노동존중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51,678	연중
	노동존중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콘텐츠 제작	39,880	상반기
기획협력 사업	노동복지기반구축 사업	86,821	연중
	서울시·자치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협력체계 강화	11,052	연중
	노동거버넌스 협력체계 강화	12,860	연중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자 조직화 지원	79,550	연중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운영체계 내실화	3,462	상반기
휴서울노동 자선택터운영	휴서울노동자선택터 운영	1,091,002	연중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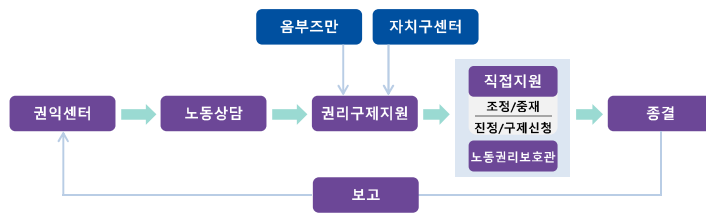
7. 서울노동권익센터 주요 사업과 문제의식: 정책연구 (2018년 서울노동권익센터)

- 1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 I: 서울지역 가사노동자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 2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 II: 서울시 일용직 노동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 3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 4 서울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혁신과제 연구
- 5 풀뿌리 노동커뮤니티 실태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연구
- 6 동향과 이슈 발간
- 7 노동정책네트워크: 노동권익포럼, 정기토론회

16

7. 서울노동권익센터 주요 사업과 문제의식: 노동상담, 권리구제 지원

	2017		2018	2019	비고
지원대상 자격	· 월평균 250만원 이하 or 기초생활수급자		· 평균 270만원 이하 or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평균임금 280만원 이하 or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노동위원회의 국선노무사 기준 250만원과 비교해서 서울시 지원대상을 차별화함. · 4인가족 중위소득의 60%인 276만원(저소득가구 기준) 고려함.
지원수당 (수입료)	진정, 구제신청	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 구제신청(초심), 산재신청 : 50만원 · 구제신청(재심) : 60만원 · 산재신청(질병) : 8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 구제신청(초심), 요양신청 : 50만원 · 구제(요양)신청(재심) : 70만원 · 산재신청(질병) : 8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요양)신청(재심)은 담당기관이 세중시에 소재함을 고려하여 증액 · 산재신청 증액(질병)은 사건의 난이도를 반영
	소송	100만원 ~ 200만원, 성공보수별도	변경 없음	변경 없음	



17

7.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주요 사업과 문제의식: 서울노동아카데미

-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노동교육을 서울노동아카데미로 통합해 운영
- 대상별·내용별 노동교육과정 설계해 서울시민에게 맞춤형 노동교육 제공
- 교육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안정적인 노동교육 제공 기반 구축
- 교육 대상 발굴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협력관계 강화·확장
- 연간 220회 교육 진행

서울노동아카데미 통합 전	서울노동아카데미 통합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노동자 건강안전교실 · 청(소)년 참여형 노동인권교육 · 지역으로 찾아가는 시민노동법률학교 · 움직이는 노동교실 · 사용자 노동법률 교육 · 시범교육사업(노동인문학1, 2) · 노조단체역량강화직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노동아카데미 ① 내일그림과정 :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② 내일채움과정 : 시민대상 교육 지원 프로그램. ③ 내일이룸과정 : 소규모 심화과정 프로그램. 시민 대상 심화 과정과 노조·단체 활동가를 위한 심화과정으로 구성. · 사용자 노동법률교육 : 중소기업주 노동법률교육으로 분리, 확대

18

7. 서울노동권익센터 주요 사업과 문제의식: 지역노동복지기반구축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취약계층노동자들 대상으로하는 지역밀착형노동사 업추진의기본조성	금액(천원) 18,000	59,000	85,000	60,000	66,000	
신청 단체수	8개	A형 6개 B형 5개	A형 6개 B형 11개	A형 3개 B형 2개	씨앗형(신설/노동자소모임) 7개 새싹형(신설/신생 노동조합) 9개 열매형(지역 노동단체) 5개	
선정 단체수	7개	A형 6개 B형 3개	A형 6개 B형 4개	A형 3개	씨앗형(신설/노동자소모임) 6개 새싹형(신설/신생 노동조합) 2개 열매형(지역 노동단체) 2개	
○노동정책기본계 획에 따른 지역노동단체거버 넌스체계의구축추진	발전 과정	· 취약노동자, 주민모임 형 · 지역노동네트워크 구성 · 사업유형 세분화 · 신규사업 발굴, 계속사업 지 원	· 지역노동기반구축단 구성 · A형 사업 연속 지원	· 지역노동기반구축단 운영 지속 · A형 사업 연속 지원	· 사업유형 및 지원규모 다각화 · 노동자 소모임 및 신생 노동조합의 안 정화 지원 · 지역 노동거버넌스 구축 지원	
○지역의노동역량강 화,사업기반미련	대표 추진사업	· 방과후 강사 실태조사 · 청소년·청년 심야노동 실태 조사 · 도봉구 여성노동자 건강 체조교실 · 알바권리찾기 ABC · 여성뷰티업계 근로실태조 사 · 우리동네노동인권 지도만 들기	· 노동자 마을학교와 찾아가 는 상담 · 돌봄노동자 스트레칭 교실 · 돌봄노동자 법상모임 · 노동인권학교 · 특성학교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조사 · 편집디자인과 인문학의 만 남	· 마을노동자 역사체험 나들이 · 노동존중 예술작품 발굴사업 ·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노동 자 학교 · 청소년 노동인권캠프 · 이주 가사노동자 노동인권 실 태조사 · 동적지역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 봉제노동자 커뮤니티 FGI 권 익향상 사업 · 대리운전기사 직무역량교육	· 영등포구 돌봄노동자 모임(노동 자 인권해봄이) 구성 · 영등포구 주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마을사업(밥상모임 등) 진행 · 동대문구 청년비정규직노동자 동아리 운영 · 동대문구 민관 노동협치를 위한 간담회 추진 · 가락시장 노동자 노동실태조사 · 송파구 지역 노조(송파유니온) 창립	· 학교 급식노동자 불령소모임, 청소년노 동자 품물 소모임 운영 · 종로구 노동복지센터 설립 추진 · 동아시아 노동운동사 연구 · 동척구 주민노동자 모임 운영 · 학습지도사 조직화 추진사업 · 배달노동자 노동환경개선사업 · 공정한 방송제작현장을 위한 직종별 무 가이드북 vol.1 방송작가편 발간 사업 · 동대문구 지역 내 노동의제 확산을 위한 노 동협치 기반구축사업 · 영등포 지역 노동권리 증진 및 주민의 노 동인식 개선 사업

19

7. 서울노동권익센터 주요 사업과 문제의식: 중간지원조직, 노동허브



20

7. 서울노동권익센터 주요 사업과 문제의식: 중간지원조직, 노동허브

- 모토: 노동과 지역의 든든한 연결고리
- 연속토론회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노동정책 확충방안
- 2014.3.25(1차)/4.1(2차)
- 서울지역 노동단체 현황조사
- 출범식-2016.9.7
- 23개 단체 참여
- 2017년 이후 매월 집행위원회, 분기별 운영위원회 진행
- 2017년 전국지자체지원노동센터협의회 및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와 공동워크숍 진행(노동센터의 역할과 상근자의 인식 설문 조사 결과 발표)
- 2018년 서울시 노동정책에 따른 변화에 대한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의 대응방안, 역할 및 방향설정을 위한 워크숍 진행
- 2019년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 선정을 통해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의 활동 내용을 담은 스토리북 발간 예정



21

7. 서울노동권익센터 주요 사업과 문제의식: 쉼터운영

명 칭	위 치	구 분
A 휴서울이동노동자 (북창)쉼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38(북창동)	주간(퀵서비스)
B 휴서울이동노동자 (서초)쉼터	서초구 사평대로 354(서초동)	야간(대리운전)
C 휴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	마포구 독막로 5(합정동)	24시간시범운영

※각 쉼터 3명 근무, 합정 (24시간)시범운영 2명 추가 = 11명



22

7. 서울노동권익센터 주요 사업과 문제의식: 쉼터운영

주요 프로그램 및 제공 서비스

구분	운영프로그램	협조기관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강 상담 및 교육	서울근로자건강센터
	금융 복지 상담 및 교육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주거 복지 상담 및 교육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본부
	법률 지원 상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직 지원 상담	서울시50플러스재단
	직무 교실 운영	서울노동권익센터
휴게 및 상담, 교육 공간 제공	휴게실(남), 휴게실(여), 사무실, 창고(다용도실), 취식공간(당비실), 회의실, 상담실, 당사자모임 공용 사무 공간, 교육실 등 제공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지원	이동노동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컨퍼런스, 법제도 개선 활동 지원	
각종 기기 비치 지원	전선/발안마기, PC, 점수기, 전자렌지, 교육용 빔프로젝터, 휴대전화충전기, 커피 등 다과 비치 지원	

- 이동노동사업기획단을 구성하여 쉼터 사업을 기반으로 이동노동자(우선 퀵, 대리노동자)의 종합적인 권익증진 정책사업 추진
- 이동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성격의 독립적 운영기반 조성

23

7. 서울노동권익센터 주요 사업과 문제의식: 쉼터운영

명칭	위치	구분
휴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49 DMC산학협력연구센터	미디어산업 종사자



※ 2018. 5. 31. 개소

※ 3개관 업무협약에 의한 쉼터 운영 : 서울노동권익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사)한빛

24

7. 서울노동권익센터 주요 사업과 문제의식: 쉼터운영

서울버스노동자들을 위한
서울셔틀버스노동자쉼터 개소식
셔틀버스 노동자의 편안한 쉼, 휴서울셔틀버스노동자쉼터

서울시 셔틀버스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공간을 지원하고 '쉼다'라는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전입니다. 은평구에 새롭게 문을 연 쉼터 개소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휴서울셔틀버스노동자쉼터 개소식

일시 2019년 7월 16(화) 오전 10:30 ~ 오후 2:00

장소 휴서울셔틀버스노동자쉼터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60 대입빌딩 7층(7번동))

행사순서 참석자 인사, 개황산언, 내빈소개, 현안식, 개회사, 축사, 쉼터 개소 경과보고, 주요 사업 및 운영계획 발표, 기념사진 촬영, 참석자 선별 증정

관리찾기 교육

노동 상담

물어막 시 상담지원

노동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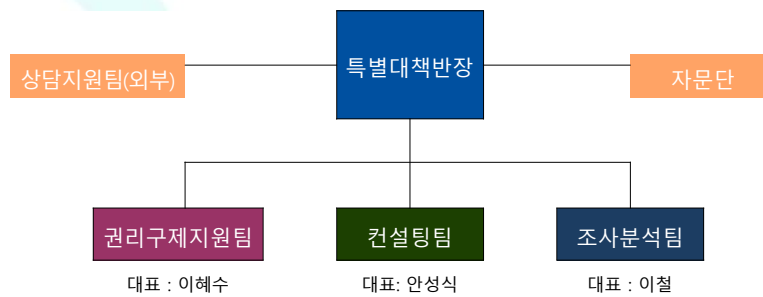
별관역, 서울혁신파크 옆에 있어요.

쉼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어요.

서울특별시 서울노동권익센터 SEOUL LABOR CENTER

25

7. 서울노동권익센터 주요 사업과 문제의식: 사업장 컨설팅_아파트고용유지대책반



- 관리구제지원팀: 부당해고구제지원, 상시 모니터링, 적극적 조정, 해고 방지 지원, 무료 법률지원
- 조사·분석팀: '18년 고용 변화 추이 조사 후 대책 수립의 근거 마련
- 컨설팅팀: 입주자대표자회의 대상 상생 컨설팅 진행

26

7.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주요 사업과 문제의식 : 사업장 컨설팅_아파트고용유지대책반

서울시 아파트경비노동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

특별대책반 **자문단**
법률자문-임주안자문

권리구제지원팀	컨설팅팀	조사-분석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법률 상담 (신청을 100건) 권리구제 지원 이해관계당사자 조정 중재 정책·동료부조연 리콜노무사 노동권리보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 근무형태 진단 정부지원제도 안내 맞춤형 개선안 제출 사업컨설팅-사업단지 산성, 대안적 모델 창출 상시컨설팅-기분적인 진단과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 아파트경비원 고용현황조사-고용안정화 추이 전수조사 유형별 상용연립 조사 최저임금 인과관계 분석 대안적 모델 제시

[서울시 아파트경비노동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

근무형태 개선으로 고용안정화 사례 ①

경비원 근무체계변경(퇴근제)

24시간 격일제 + 50% 당직 + 50% 퇴근

해고 대신 퇴근제(당직주간교대)

- 경비원 장시간 노동폐해 감소
- 입주민 관리비 상승 부담 감소

종간	종가시간	2017년	2018년	2017년	
총계시간	종가시간	(64,700명)	(75,300명)	대비증가액	
24시간 격일제	2.5	5	1,771,163	2,061,338	290,175
24시간 격일제	2.5	6	1,889,559	118,396	
50% 퇴근제	2.5	5	1,803,670	32,508	
50% 퇴근제	2.5	4	1,889,559	118,396	

- 24시간 격일제 : 24시간 근무 → 휴일 → 24시간근무 → 휴일
- 50% 퇴근제 : 24시간 근무 → 휴일 → 16시간 근무(22시 퇴근) → 휴일
- 근무시간 : 당직자 06시 출근 ~ 약월 06시 퇴근(경비원 50%)
- 주간근무 06시 출근 - 끝월 22시 퇴근(경비원 50%)

[서울시 아파트경비노동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

근무형태 개선으로 고용안정화 사례 ②

경비원 장기 휴무일 도입

24시간 격일제 + 24시간 격일제 + 월1일 휴무

경비원 장기 휴무일 도입

- 경비원 휴일 보상으로 월 관리 보장
- 입주민 관리비 상승 부담 감소

종간	종가시간	2017년	2018년	2017년	
총계시간	종가시간	(64,700명)	(75,300명)	대비증가액	
24시간 격일제	3	5	1,721,694	2,004,078	282,315
24시간 격일제	3	6	1,832,300	110,336	
월1일 휴무일	3	5	1,872,303	150,339	

- 24시간 격일제 : 24시간근무 → 휴일 → 24시간근무 → 휴일
- 휴일제 도입 : 월 1일 경비원 휴일 보장
- 1일 휴일 급여계산 : [(24-3-5)+08-5]x0.5 x 7,530원 = 131,775원
- 2018년 월급 : 2,004,078원-131,775원=1,872,303원(휴일도입시)

[서울시 아파트경비노동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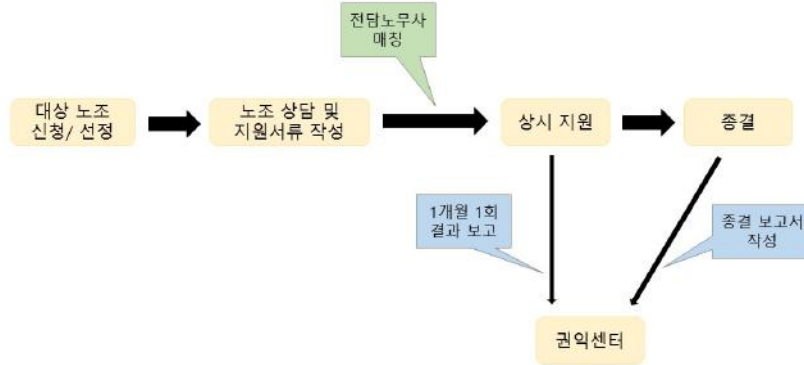
7. 서울노동권익센터 주요 사업 및 문제의식: 조직화(노조설립) 지원사업

<p>기존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복지센터별로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신규(생)노조의 교육사업, 정책사업(조사, 토론회 등),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공식화하고 예산배정 확대
<p>상담 영역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성(상급)노조의 요청이 아닌 현장 노동자 직접 요청 (개별적)노동상담의 영역을 사업장 단위의 노조상담영역으로 확대 노조법을 기반으로 상담은 가능하나, 단체교섭과정에 지원을 하지 못하면 노조 상담은 무의미함.
<p>업종별 조직화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단위가 아닌 업종별 조직화 지원.(전략적 기획사업) 노동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노조, 시민사회단체의 광범위한 지원 조직 이미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전략적으로 고려할만한 업종 - 도심제조업(봉제, 인쇄, 제화, 주얼리, 기계금속), 플랫폼노동시장(대리운전, 킥서비스, 배달), 아파트경비노동자
<p>비노조 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풀뿌리 노동커뮤니티 지원〉 : 서울노동권익센터 하반기 연구 과제로 진행 중임 현 자치구노동복지센터가 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회원제 모임'을 조직하고 자조조직으로 활성화 방안

28

7. 서울노동권익센터 주요 사업과 문제의식: 조직화 지원사업_집단적 노사관계 법률지원

- 사업대상: 조합원 규모 100인 이내, 설립 2년 이내의 노동조합
- 자문노무사 구성: 노동조합 전문경력을 가진 외부 전문가(공인노무사) 집단을 구성하여 특정 노조 지문을 전담하도록 하고 월 소정 자문료를 지급함.
- 세부 사업내용
 - ① 각 산생노조에 전담노무사를 배정하여 상시 지원 제공
 - ② 노조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 제공 및 협약서 등의 검토
 - ③ 필요시 단체교섭에 법률대리인으로 참석



29

7. 서울노동권익센터 주요 사업과 문제의식: 업종별 조직화 지원 사례_도심제조업

9만 서울 봉제인, 노동조합 창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제회 모델과 민관·민민 개혁신상을 통한 조직화 방안

이번 토론회를 통해 봉제인 9만 서울봉제인 노동조합 창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후, 국회 공제회 및 상법위원회에 건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	윤호중 의원 (서울노동조합연맹)	
장소	이룸보 서울시청대강당 2호	
단체장	신동철 (대한봉제협회 회장), 김수호 (9만 서울봉제인 대표), 김광현 (서울노동조합연맹 대표), 김승현 (서울노동조합연맹 대표)	김수호 (9만 서울봉제인 대표), 박광순 (서울노동조합연맹 대표), 이상훈 (서울노동조합연맹 대표)
발제1	봉제노동자 서울시 관공에서 차기에는 워킹타임 연장, 김광현 (서울노동조합연맹)	
발제2	서울봉제노동조합 조직화의 의의와 향후 계획, 김광현 (서울노동조합연맹)	
발제3	도심제조업, 봉제노동, 봉제공제회를 위한 민·관개혁신상 활성화 전략, 김승현 (서울노동조합연맹)	
패널토론	서울시, 서울노동조합연맹, 서울봉제인, 서울노동조합연맹, 서울노동조합연맹 등	
종료지점	종단 전역	

주최: 2018봉제공업지원단
 서울노동조합연맹 (주최), 서울노동조합연맹 (공동주최), 서울노동조합연맹 (공동주최), 서울노동조합연맹 (공동주최), 서울노동조합연맹 (공동주최)
 후원: 한국노동연구원, 서울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노동조합연맹
 후원: 이상훈 서울노동조합연맹, 김승현 서울노동조합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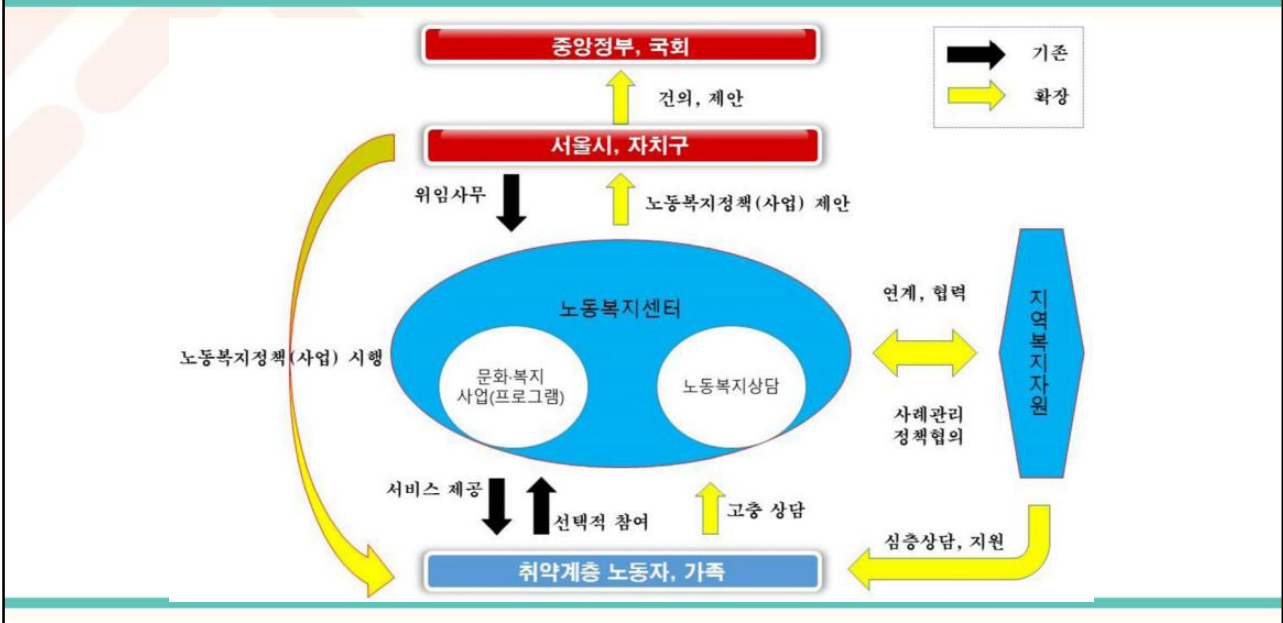
30

7. 서울노동권익센터 주요 사업과 문제의식: 업종별 조직화 지원 사례_이동노동사업단

<p>〈이동노동사업단〉</p> <p>플랫폼노동-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노동</p>	<p>목표</p>	<p>플랫폼 노동자의 주체형성과 권익보호 / 대리퀵서비스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p>
	<p>사회적교섭</p>	<p>노동조합 (당사자단체) 소비자 서울시 (노동청, 유관기관)</p> <p>업체, 플사, 보험사 공익지원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자))</p>
	<p>중요사업 부문</p>	<p>조직화 사회적교섭 추동 노동복지상담 (고충상담) 교육사업 심터활용 효과극대화</p>
	<p>사업단 참여 주체</p>	<p>노동조합(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리노조, 퀵노조), 당사자단체(협동조합 등), 서울노동권익센터(심터), 전문연구자, 시민사회단체(소비자, 노동복지상담주체)</p> <p>(○○분과회의) (○○분과회의)</p>

31

7. 서울노동권익센터 주요 사업과 문제의식: 지역복지자원 연계, 노동복지사업 확장



32

- 서울노동권익센터는 광역허브기관으로 역할 재정립
 -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
 - 노동복지센터협의회를 통한 역할분담 논의 및 정비
 - 광역허브기관으로 역할 정립에 따른 인력 및 예산에 관한 분석과 투입계획 수립
- 서울시 노동정책의 확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례 검토 및 행정부서 확충
 - 기존 조례에 대한 검토와 정비
 - 민간부문으로 확장을 위한 조례 제·개정 검토
 - 노동행정부서 확충으로 정책과 실행체계 확보
- 자치구단위까지 노동행정(정책) 확산 추진
 - 자치구노동복지센터 명칭 변경 및 통일, 노동권익보호 사업체계는 통일적으로 관리
 - 자치구 행정에 노동행정 도입 및 구단위 노동거버넌스 구축 추진
 - 지역기반 노동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입(노동단체지원에 관한 조례 확대적용)
-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업무협력을 위한 서울시(권익센터), 시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 추진

감사합니다.



사례발표 2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사례-

박재철 |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센터장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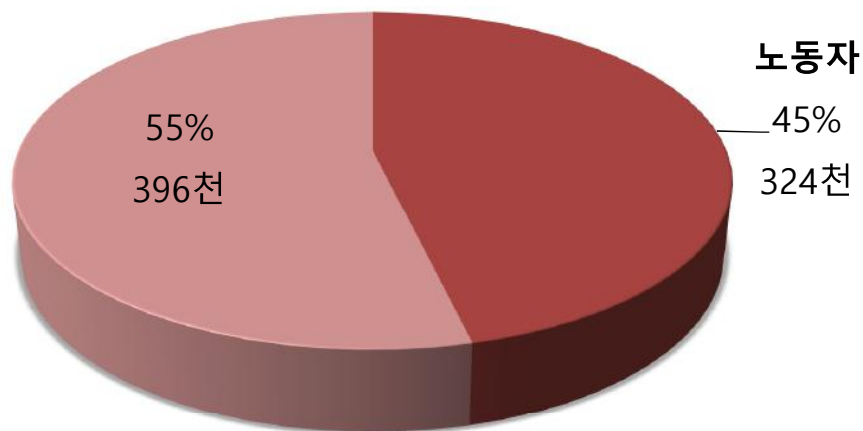


박재철(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1

안산시 노동현황

안산시민 중 노동자는 얼마나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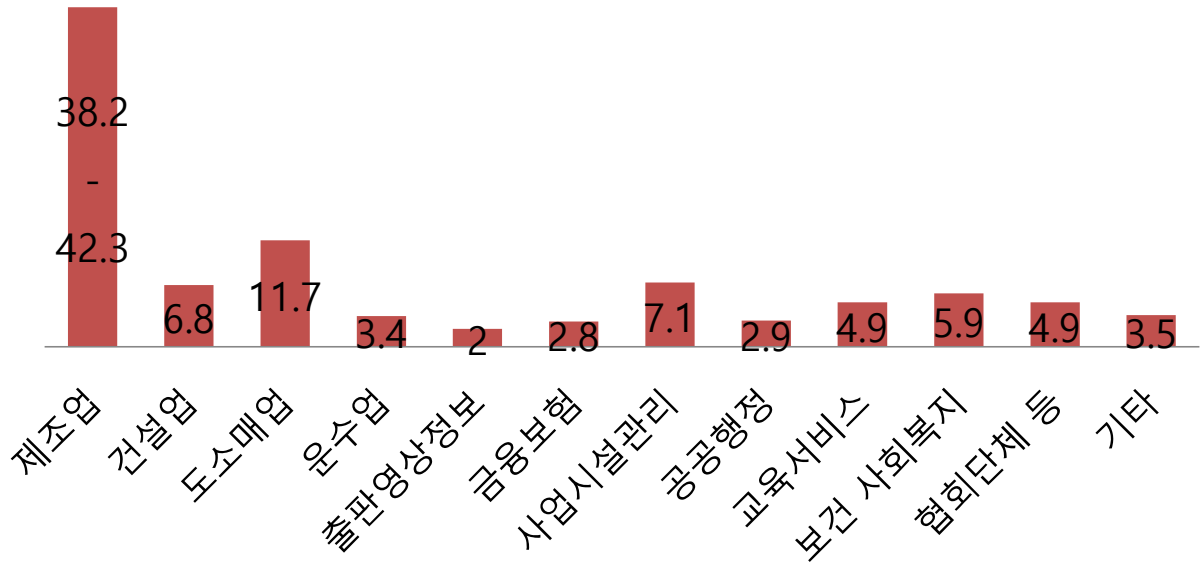


안산시 평균 가구 구성원 수 : 2.69명

1

안산시 노동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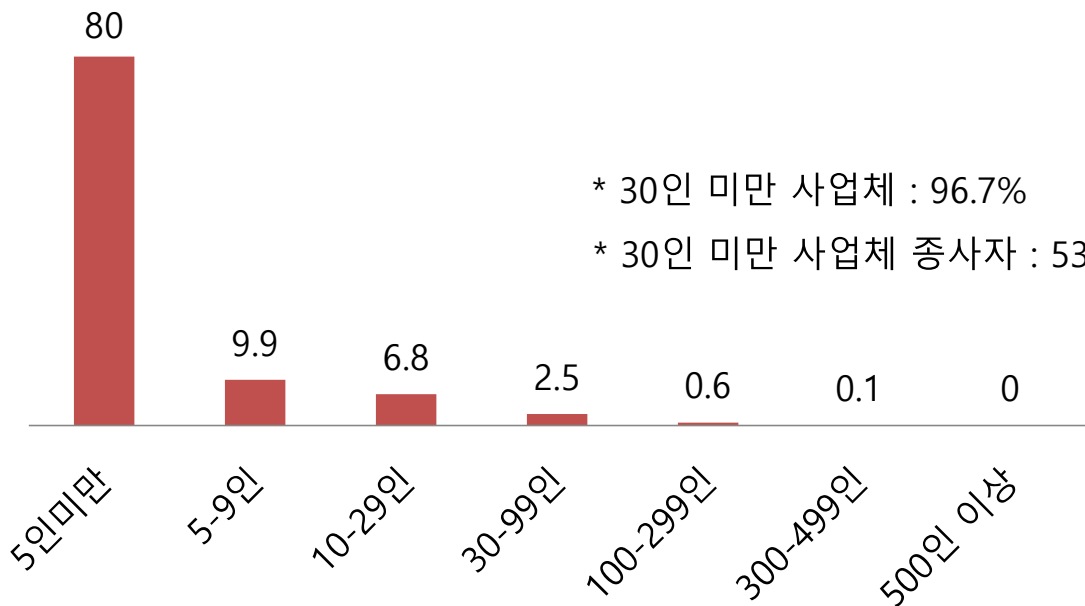
특징1 : 제조업 중심



1

안산시 노동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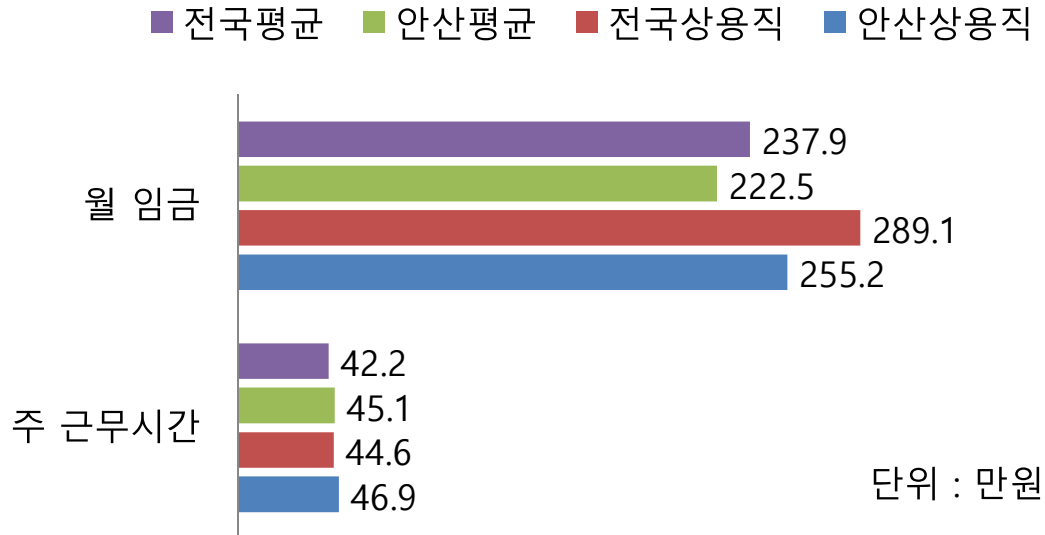
특징2 : 영세사업장 밀집



1

안산시 노동현황

특징3 : 저임금 장시간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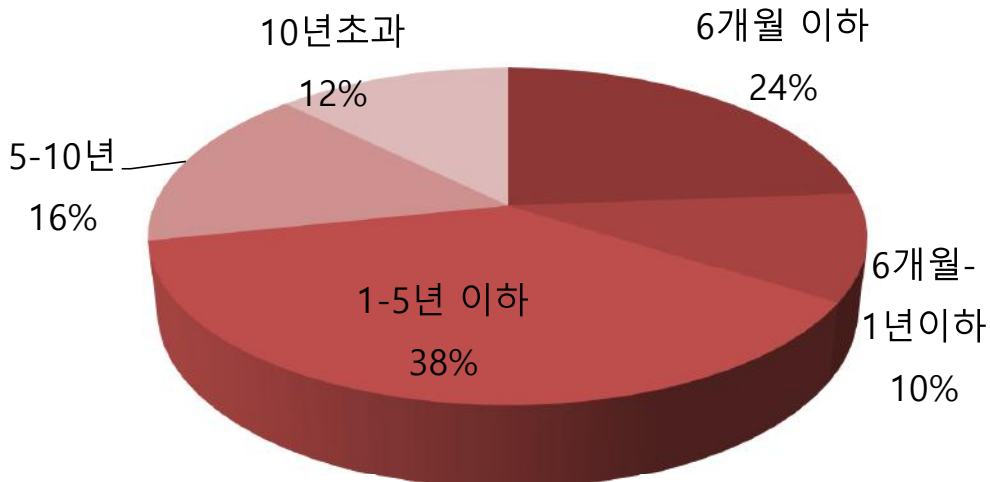


1

안산시 노동현황

특징4 : 불안정한 일자리

짧은 근속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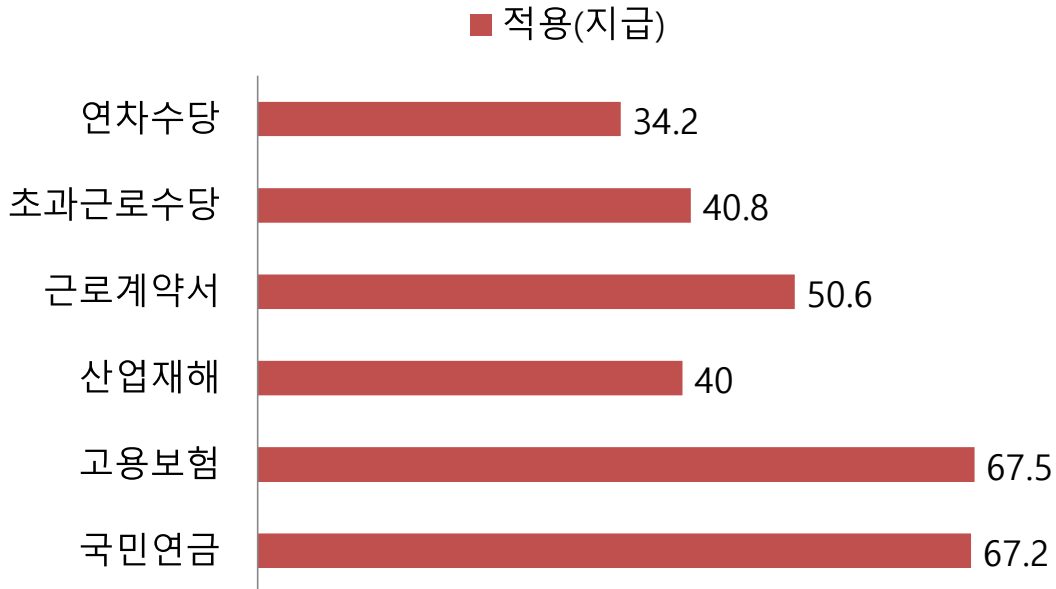


* 평균 근속연수 : 4년, 전국 평균 4.9년

1

안산시 노동현황

특징5 : 취약한 기본권



1

안산시 노동현황

특징6 : 위험한 일터

안산시흥스마트허브

-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 0.8%, 연 3,360명
- 중대재해 발생률도 최대 수준, 연간 30-70여명 사망
- 숨겨진 산업재해를 감안하면 현실은 더 높은 수준

유해 화학물질 저장현황

- 반월공단 56,906톤
- 시화공단 9,349톤
- 여수공단 15,138톤



1

안산시 노동현황

특징7 : 외국인 노동자

- 안산시 거주 이주노동자 7만1천여명
고용 허가제 10.5%, 방문 취업제 38.7%,
결혼 이민자 7.2%, 유학 1.2%, 전문인력 0.6%,
기타방문 17.4%, 외국국적 동포 24%
- 조선족(46천), 중국(7천), 우즈베키스탄(4.8천),
베트남(2.5천), 한국계러시안(1.4천), 인도네시아(1.3천),
필리핀(1.2천), 네팔(7백), 캄보디아(6백), 스리랑카 (6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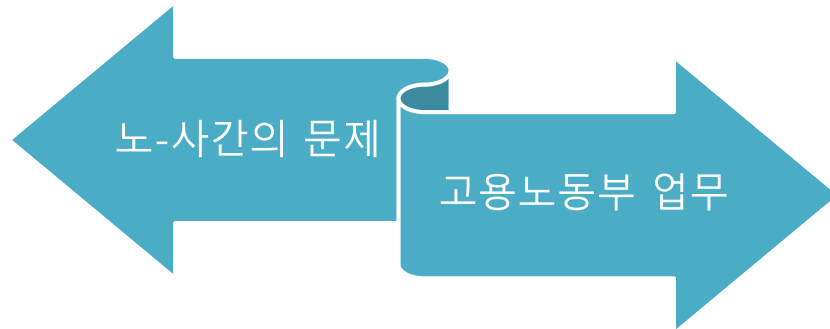
1

안산시 노동현황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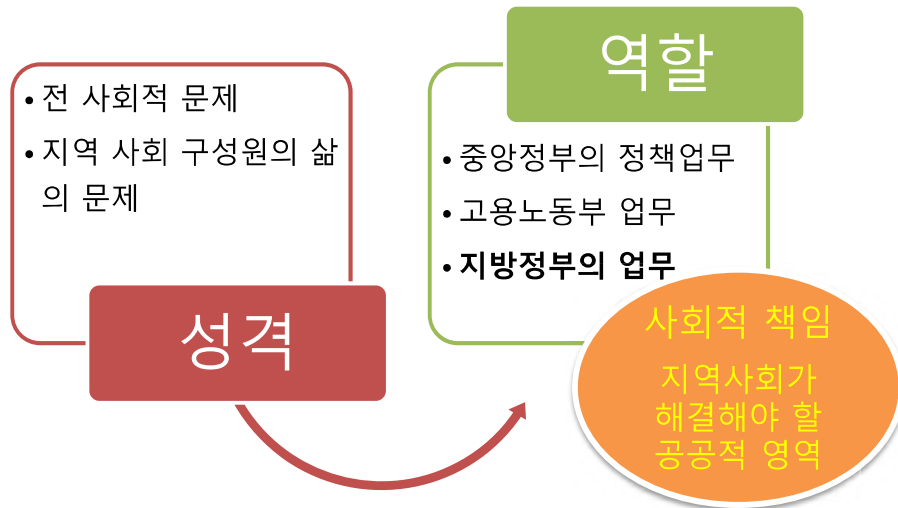
노동문제



노동문제



노동문제



노동인권보호 & 좋은 일자리 확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일자리창출 및 노동환경개선

❖ 지자체 비정규직 지원센터로 시작

2003년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로 시작해
현재 전국 28여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
비정규직 뿐 아니라 여성, 청년 등 다양화

❖ 노동행정으로 확장

노동인권보호조례 제정
노동관련 부서 설치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지자체별 기본계획수립



3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

❖ 대상

과거 : 노동조합 및 단체 협력
 현재 : 비정규직, 여성, 청년 등
 취약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 기능

- 1) 상담 및 권리구제 2) 실태파악 및 정책연구
- 3) 교육 4) 홍보 5) 감시 및 개선활동
- 6) 노동자네트워크 지원

- 공공적 서비스기능
- 교육, 홍보, 감시 등 예방적 노동행정
- 사회적 대화와 협약 추진
- 민선 7기 들어 확장 추세



4

안산시의 노동행정 현황

1998 안산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
 2005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2009 안산시산업단지복지관

2012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12, 2015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2015
 안산시 노동정책팀 구성

2015 -2016
 안산시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노동인권보호 위원회

2017
 안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4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 **2012년 7월 6일 운영시작**

근거 :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운영방식** :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에 위탁운영

- **주요사업** : 정책연구, 노동상담, 노동기본권보호(노동인권지킴이), 노동자 교육, 노동자 문화지원

- **상근인력** : 센터장, 노무사 포함 8명

- **1년예산** : 4억7천1백2십9만5천원(2018년)

1. 정책연구사업

- 안산시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실태조사
- 안산·시흥지역 파견노동 실태조사
- 10인미만 사업장 사회보험 실태연구
- 노동자 마음건강 실태조사
- 지역노동자 생활실태조사
- 중소기업 구인구직 실태조사
- 안산시요양보호사 노동실태조사
- 안산시아파트비정규직 실태조사
- 제조업 장시간 노동실태조사
- 안산시 감정노동실태조사
- 안산·시흥지역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매년)

2.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사업

- 노동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 제작 운영
- 매년 상담사례집 발간
- 노동상담 지역네트워크 구축
- 365상담체계 구축
- 찾아가는 이동상담
- 지역 노무사네트워크 구성



3. 권리보호사업

- 안산시노동인권지킴이 6명이 매년 6개월간 활동

1) 단시간노동자

- 안산시내 편의점, 커피숍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 900여 개 사업장 전수조사 -> 개선활동 [안심알바사업장]

2) 아파트비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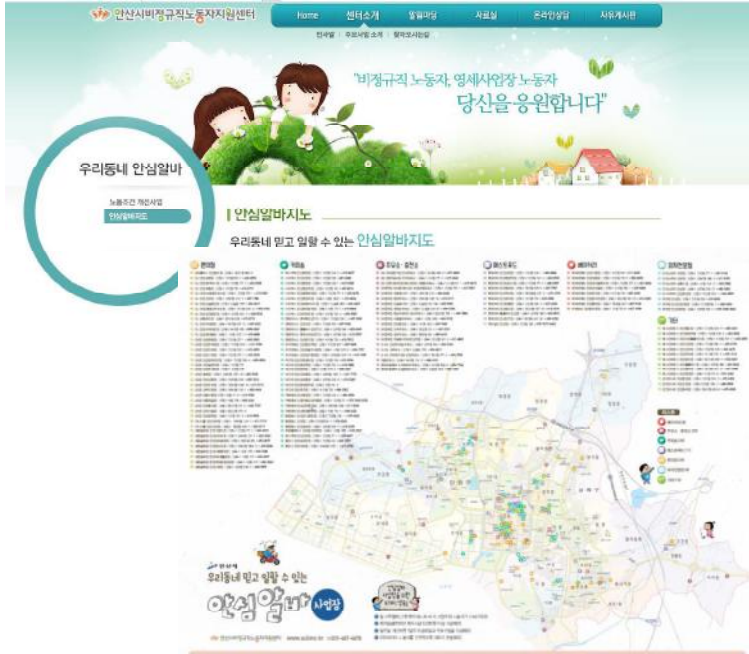
- 안산시내 120개 아파트 전수조사 -> 개선활동 [상생협약]
- 아파트경비노동자 모임 설립 지원

3) 제조업 불법파견

- 파견업체 326개 전수조사 -> 무허가 미신고, 불법파견 신고

알바 노동환경 개선 사업

조사 - 분석 - 개선활동(홍보, 교육, 안심알바 지도, 사회협약 등)



검색하기

- 동별 안심알바사업장 검색, 지도표시

추천하기

- 내가 아는 안심알바사업장 추천하기

수정요청

- 사실과 다른 내용 수정, 위반사업장 신고

안산 단시간 노동자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안산시, 고용노동부, 프랜차이즈 본사, 안산시의회 등 대책 협의

노동인권보호 협약 맺은

안산시,
안산시의회 의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프랜차이즈 본사
(주)BGF리테일,
(주)GS리테일,
(주)롯데지알에스,
(주)코리아세븐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주관으로 22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산시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사업 상반기 활동보고회'에는 김동수 김태희·나정숙 의원과 박용훈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감독관, 프랜차이즈 본사의 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4. 교육사업

청소년노동인권교육

- 경기도 안산시 초, 중, 고등학교 교육

노동법률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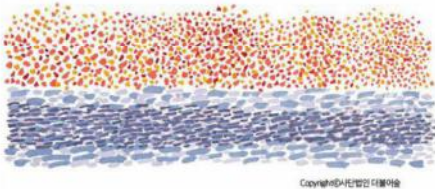
- 기본강좌 5강, 심화강좌 4강 평균 70명

성공회대학교와 함께하는 안산노동대학

- 11주(3개월) 4년 과정, 2018년 107명 입학

성공회대학교와 함께하는

안산노동대학



인생은 가슴처럼 뜨겁고
마음은 꽃처럼 피어나리

성공회대학교와 함께하는
안산노동대학

안산노동대학으로 초대합니다

안산노동대학은

노동자를 위한 인문학 교육기관입니다
배우고 깨우치며 만나고 소통하는 즐거움이 있는 배움의 공간입니다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와 함께 합니다
17년 이어온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의 우수한 강사진과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노동자들의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노동과 삶에 대한 깊이는 성찰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진보를 꿈꿉니다

학사과정

교육과정 1년 1학기제, 학기당 10강으로 구성
교육시기 매년 하반기(9월~11월) 진행
교육내용 한 학기에 하나의 테마, 총 4개 테마 순환 운영(역사·경제·문화·세계)
수료조건 한 학기 총 10강 중 8강 이상 수강(보충수업 포함)
졸업자격 4학기 4개 테마 수료
보충수업 교대근무자를 위한 동영상 강의 준비



학장소개



하종강 안산노동대학 학장 ·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수료특강 **하종강이 묻고 한상균이 답하다**
주요저서 <그레고리우스 노동운동> <힘들지 않는다는 것>

안산노동대학은 역사, 경제, 문화, 세계의 노동 4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해는 2014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맞이하는 '노동과 경제'가 주제입니다. 경제란 무엇인지, 자본주의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열심히 일해도 살림살이는 왜 제대로 안인지, 노동자들이 좀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평소 한번쯤 생각해보았을 경제 문제를 좀더 다채롭게 풀어보았습니다. 안산노동대학으로 오십시오. 나이다, 학력도, 경력도, 저위의 문턱도 없습니다. 오로지 노동에 대한 애정과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오십시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성공회대학교와 함께하는
안산노동대학

노동, 경계를 만나다

강사진 소개



김전항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일허락장 통일시대 남북 경제협력
주요저서 <개성공단 사람들> <안반도평화체제>



강신준 동아대학교 교수

2강 다시 보는 마르크스 7자본,
주요저서 <오늘 자본을 읽다> <공부의 신 마르크스, 돈을 연구하다>



송기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3강 세계 자본주의 어디로 가나
주요저서 <자본주의>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4강 재벌의 흑역사
주요저서 <한국 재벌의 흑역사> <10대를 위한 경제학 수업>



박준성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5강 빨치산을 품은 지리산 역사기행
주요저서 <노동자 역사 이야기>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정대인 경제학자 · 전향물라이사회경제연구소장

6강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주요저서 <협동의 경제학>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숨겨진 법칙>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7강 복지사회와 조세개혁
주요저서 <나라는 무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왜가 만드는 공적연금>



최병현 정책혁신가 ·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8강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
주요저서 <한국회의원보좌관, 사자본역년 연구위원>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운영위원장

9강 복지국가로 가는 길
주요저서 <한반도, 복지국가를 부탁해> <복지국가의 길>



한상균 전민주노총 위원장

수료특강 **하종강이 묻고 한상균이 답하다**
주요저서 <전병용자동차노동조합 지부장, 전민주노총 위원장>

2018년 9월 5일 ~ 11월 21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4층 회의실

주최 **안산시**
주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후원 **성공회대학교**

5. 생활문화

가족 캠프 '한여름밤의 꿈'

- 노동자 가족 100여명 참석

동아리 문화활동

- 노동자 동아리 여행 동아리 더불어숲, 도자기 만드는 토닥, 영화보기 영화술사, 영화만드는 안산쭈민, 주말농장 상상, 봉사동아리 따숲네 등 활동 지원 => 동아리 연합회 결성

6. 소규모 사업장 지원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 지원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400곳 접수
- 상반기 42개 사업장 심층 컨설팅 진행
- 사업주 교육 및 간담회 "골목간담회" 2회 진행

취약노동자 취업지원

- 구직상담 - 동행면접 - 관리업체 취업 지원
- 전문가와 함께 보는 급여 명세서 '나의 첫 월급 점검하기' 진행
- 청년노동자 일자리 적응 멘토 진행

4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비정규센터 연간 사업 흐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정책연구사업											
노동상담 일자리알선											
청소년노동인권교육 및 강사모임											
노동법률강좌						안산노동대학					
노동인권지킴이 활동											
동아리활동				한여름밤의꿈				동아리송년회			
좋은이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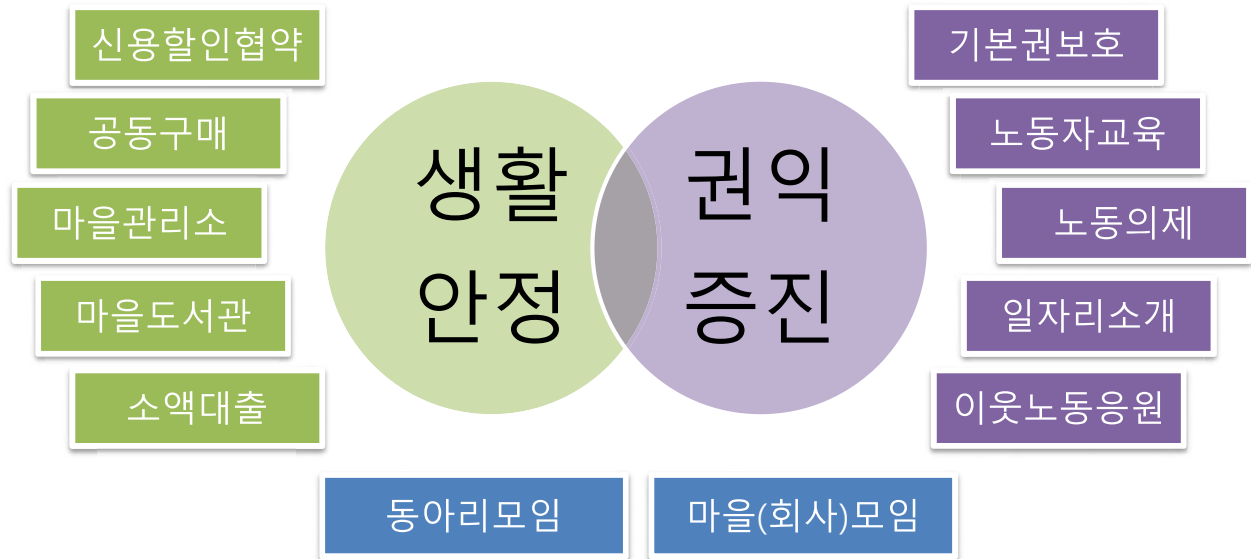
2015년 3월 25일, 좋은이웃 창립



5

노동자 당사자 조직 지원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설립목적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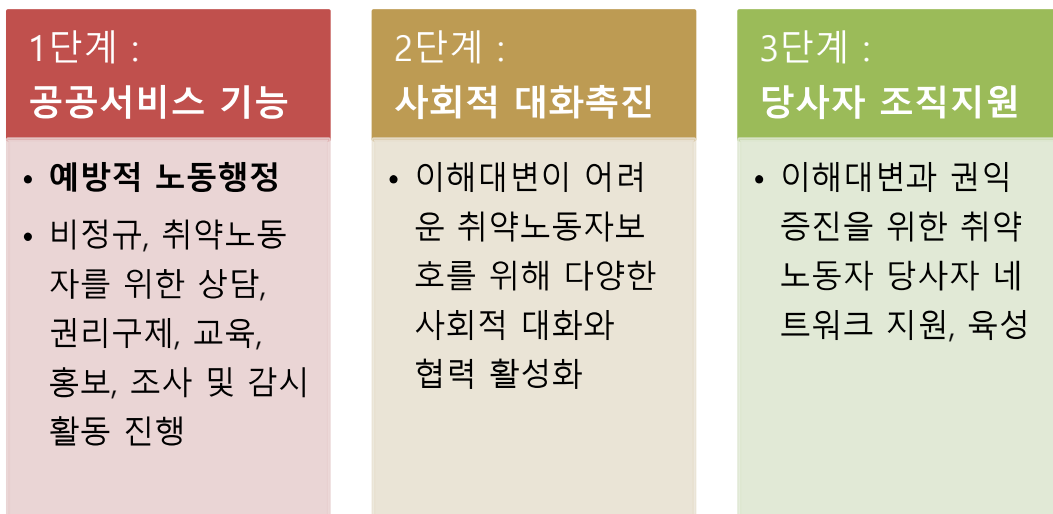


6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비전

- 지방분권시대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방향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노동인권보호와 이해대변”



토론 1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증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토론문

정경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141차 노동포럼
“지역사회·노동자 권익·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토론문

정경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질문

- 주제발표자인 김종진 부소장은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자체와 갈등(3.56점), △정책 역량 한계(3.33점), △지역 무관심(2.89점), △재정 한계(2.78점), △회원 확대 한계(2.44점), △불협화음(1.78점), △내부 갈등(1.57점) 순으로 조사됐다고 제시하였음. 발표문은 노동조합이 중간지원조직 활동에 개입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현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결론에서 언급하지 않았음. 발표자가 생각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기 바람.
- 사례발표자인 이철 팀장과 박재철 센터장의 발표문에 따르면 센터에 아무런 문제점도 없어 보이는데 사실인가. 지자체와 갈등, 정책 역량 한계 등 앞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현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2. 논의

- 그동안 미조직·저임금 노동자들이 노동정책·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었음. 노동조합과 지역사회 운동이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저임금·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문제를 해소하도록 개입할 필요성에 공감함.
- 지역 공동체·노조 운동 관점을 제기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광역·기초 수준의 노동권익(복지)센터 역할과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함.
- 첫째, 취약한 조건의 노동자들은 스스로 자신이 처한 노동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 게 특정한 문제해결을 위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자신들의 요구와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더욱 외주화(contracting out)하게 되는 중독 효과(narcotic effect)를 야기할 수 있음.
- 둘째, 자치단체가 민간위탁을 민관 거버넌스로 포장한다는 비판을 가할 필요가 있음. 노동권익(복지)센터는 대부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노동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이나 실질적인 참여 메카니즘인지 알려진 바 없음. 또한, 노동권익(복지)센터는 실제로 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이 주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음. 지방정부가 노동문제를 해소할 조직을 직접 설계하지 않고 사회단체에 위임하는 것에 불과함. 미국에서도 노동자 센터(workers center)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활동의 폭이 줄어들고 정부의 사업을 대신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음.
 - 셋째, 지역의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들의 규모를 볼 때, 노동권익센터가 제공하는 노동기본권과 노동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는 노동자들은 소수이며, ‘물 한 방울 (small drop)’ 떨어뜨리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가능함.
 - 마지막으로, 지역의 노동단체들이 자신들의 고유 활동과 노동권익(복지)센터 활동이 ‘주객전도’ 될 경우 노동단체의 인력과 활동은 축소되고 노동권익(복지)센터가 중심이 되는 모순이 발생할 것임. 특히, 다음 지방선거 때 보수정당이 집권할 경우 노동권익(복지)센터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며, 과거에 참여 정부 때 시민사회단체가 지나치게 정부 재정에 의존하다가 보수정당이 집권한 이후 인적 재정적 역량이 매우 취약해진 경험을 기억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비판적 관점을 고려할 때, 지역의 노동단체들은 자체적인 활동과 역량 강화, 지역 노동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축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하며, 노동권익(복지)센터 개입은 지역 노동자 접근성 확보와 조직화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설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서울시 노동자 권익 중간조직의 발전방향

조성주 | 前 서울시 노동협력관

<토론문>

<서울시 노동자 권익 중간조직의 발전방향>

- 조성주 전 서울시 노동협력관

- 발제자의 주제발표에서 잘 정리되었듯이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본격적으로 지방 정부 차원의 노동정책을 시작한 2012년부터 기존에 구청에서 설치했던 ‘노동복지센터’를 확대해 왔으며 2014년에 이르러서는 광역차원의 역할을 하는 ‘서울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했음. 그리고 2019년에 발표한 서울시 노동실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의 구와 광역의 중간에 해당하는 ‘권역’ 차원의 ‘노동자종합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

- 서울시의 노동정책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두 영역에 미칠 수 있는데 공공부문에서 ‘모범적 사용자 역할’은 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이사제 도입’, ‘생활임금제 도입’ 등으로 나타나며 ‘민간부문’의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자치구에 만들어진 ‘노동복지센터’들과 광역 차원에 역할을 하는 ‘노동권익센터’로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기존에 서울시는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을 잘 하면 이것이 민간에 확산된다는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전략을 말해왔으나 현실적으로는 ‘중간지원조직’이 민간부문의 실질적인 노동행정, 또는 노동정책의 구현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노동복지센터’들과 ‘노동권익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들을 서울시가 집행하는 민간부문 노동정책의 중심적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그에 걸맞는 지원체계와 예산, 조직, 역할들을 설계했어야 하나 지금까지는 그런 차원에서 논의되어 오지는 못했음

- 민선 7기에 이르러 기존의 노동자 중간지원조직들에 ‘조직화 지원 기능 추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worker center)’로 확대강화 등이 공약사항으로 제시되어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에 한정했던 기존의 역할을 뛰어넘는 구상을 제시하는데 이르렀음.

- 물론 새롭게 발전될 각종 중간지원조직들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지원에 일차적인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발제자의 지적처럼 이것이 단순히 인바운드 형식의 상담과 각종 문화복지 사업 제공에 그쳐서는 안되며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노동행정으로 발전되어야 함

-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과 조직이 더 늘어나야 하는 지점도 있겠으나 일단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있는 노동행정의 차이를 메꾸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 서울시는 노동정책과를 비롯해서 타 부서(여성정책실 등)에도 노동을 담당하는 팀과 인력이 조금씩 생기고 있으며 이미 지난 8년여간의 경험으로 인해 노동정책 수립과 집행의 기본적인 틀이 있음. 그러나 자치구의 경우 여전히 노동정책의 방향성 수립과 적극적인 행정력 동원에 소극적인 입장임. 그간 서울시는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자치구 소관이며 서울시는 광역차원의 노동권익센터와 새로 설치될 권역별 센터를 관장하는 역할로 한정했음

- 그러나 현재 설치되는 속도로 보면 2020년이면 거의 20여개에 달하게 되는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광역 노동권익센터, 그리고 권역별 노동센터의 각 역할이 잘 조율되지 않는다면 자칫 각자의 중간지원조직이 사업의 중복성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먼저 행정차원에서 서울시 노동정책 부서와 각 구청의 일자리과 또는 노동담당 부서들이 정기적으로 서울전역의 노동정책과 행정을 의논하는 협의 테이블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광역과 자치구 등의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잘 조정하여야 함

- ‘서울 노동권익센터’의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실질적으로 민간부문 노동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권익센터가 권역, 자치구 노동자 중간조직의 중앙 허브 역할이자 리더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서울 전역차원에서 공통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노동정책의 경우 서울 노동권익센터에서 조직과 예산을 어느정도 관장하며 이를 통해 권역과 자치구에 예산이 집행되는 일부 구조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판단됨

- 노동운동 차원에서의 인력확보 고민도 새롭게 필요함. 이미 상당한 규모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향후 더 큰 규모로 발전될 각종 노동자 중간지원조직들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활력있고 유능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함. 새로운 인력들의 활발한 순환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자칫 각종 노동자 중간지원조직들이 퇴직한 노동운동가들의 일자리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으며 시민들의 생활과 유리된 ‘그들만의 공간’이 될 수 있음. 그러나 단위 노조나 산별노조들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분야에 좋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인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음. 이러한 인력들을 초기부터 잘 육성하거나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동분야로 좋은 인력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의식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토론 3

민간단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증진조직 역할과 과제

한지혜 | 사단법인 유니온 센터 센터장

민간단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조직 역할과 과제

한지혜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센터장

들어가며

○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사례에서 보듯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활동을 모두 시도해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크게 정책연구, 법률지원, 교육홍보, 기획협력, 휴서울노동자쉼터운영으로 구성 된 사업내용 중에는 지역을 벗어난 노동문제로 볼 수 있는 프리랜서 의제를 다루고 있고, 상시 노동상담에 이어 취약계층 노동자 개별적 권리구제 지원부터 집단적 노사관계 법률지원까지 포함하며, 청소년, 시민 등 대상별 노동교육에서 노조·단체활동가 교육까지 진행하고, 노동거버넌스, 자치구노동센터 협력체계 강화 사업을 통해 노동허브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음.

○ 다만 주제발표의 내용처럼 이제 광역과 기초 센터들의 유기적 활동과 역할 조정, 통일화 사업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예시처럼 광역은 정책 및 연구조사(통계자료, 설문조사 등), 데이터 구축(빅 데이터, 상담db 사례 공유), 지역을 벗어난 노동문제 등에 조금 더 역할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함. 광역 센터로서 집중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비정규직센터가 탑재하여 지역에서 수행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봄.

○ 주제발표의 자료처럼 지역에는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만든 노동센터를 포함한 민간단체들도 존재함. 민간단체(독립센터)들은 자체적인 운영 재정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회원확대 사업에 많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음. 재정적인 부분으로 인해 여러 사업을 전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권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 집행할 수 있음. 비정규직센터는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가 위·수탁 받았지만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민간단체만큼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봄. 또한 노조 조직화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단체가 더 적극적인 개입과 장기적인 활동전개에 효과적이라고 봄.

바라는 점

○ 가장 기본이지만 중요한 노동상담에 이어 개별 권리구제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공인 노무사와 연계하고 수임료까지 지원하는 지역별 비정규직센터의 기능으로 갖춰야 함. 주제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정규직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노동상담임. 민간단체에서는 법률지원사업까지는 가능하나 수임료를 지원하는 법률구제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 최근 노동상담의 추세가 단순 정보안내나, 단순 임금계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에 진정을 넣기 위한 전략을 물어본다거나 이후 과정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권리구제지원 사업이 필요함.

○ 노동교육사업에 있어서도 노동상담사, 활동가를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주 의미있다고 보여짐.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발간한 '상담사를 위한 노동상담 매뉴얼'은 유니온센터의 상담사 양성과정의 교재로 사용하기도 함. 청소년노동인권교육 등 교육강사가 아닌 내부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기 어려운 조건(전문강사와 교육 커리큘럼의 설계)인 민간단체의 입장에서선 활동가 교육 및 활동가 재생산이라는 면에서 큰 도움이 됨.

○ 지역사회와 맞물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민간단체와 함께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임. 물론 센터의 기초 자원인 예산과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겠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지역 특화적인 의제를 가지고 있거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기획과 집행에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에 비정규직센터와 어떻게 역할을 나누는지에 따라 효과적일 것임.

○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은 노동상담만큼 중요한 사업임. 노동상담 건이 개별권리구제로 해결될 수도 있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노조 설립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도 있음. 더 적극적인 노동권리를 활용하여 실제 문제해결의 과정을 경험해본다면 더 단단한 당사자 조직이 되어 지방정부에 노동정책을 마련하는데 확실한 민간파트너가 될 수도 있음. 다만 노동자가 조직되고 설립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센터에서 모임을 지원을 하고 실제 노조와 연결시켜준다면 필요시 사업장과의 교섭에서의 지원, 설립이후 장기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해나가는 과정을 함께 해나가며 노동자들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임.

토론 4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사례를 통해 본 몇 가지 과제

나상윤 |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센터장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사례를 통해 본 몇 가지 과제

나상윤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1.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추진현황

○ 경과

- 2012년 4개 서울시 자치구센터 개소(서대문, 구로, 노원, 성동)
 - * 서대문과 구로는 2011년부터 자치구에서 먼저 설치 운영
- 2014년 서울노동권익센터 개소
- 2017년 4개 자치구센터 개소(성북, 강서, 광진, 관악)
- 2018년 4개 자치구센터 확정(양천, 강동, 중구, 중랑)
- 2019년 4개 자치구센터 및 2개 권역센터 확정(은평, 마포, 영등포, 도봉 / 도심권, 동남권)

* 유관 조직

- 이동노동자 쉼터
- 서울시 직장맘센터(2012)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2013)
-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2018)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 민선 7기 박원순 시장 공약으로 제시
- 핵심 비전이 노동존중특별시에서 유니온 시티(union city)로 진화
- 체불임금신고센터 설치, 노조설립 지원, 워크라운드 설치 등과 함께 주요과제로 제시

2. 노동복지센터의 사업영역과 주요 성과

1) 사업영역

- ① 취약계층 노동자 법률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 ② 미조직노동자(비정규직)의 노조설립 지원 <= 2019년 신설
- ③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 ④ 교육 및 취업지원
- ⑤ 문화복지프로그램
- ⑥ 서울노동권익센터 등과의 협업

2) 주요 성과

- 노동상담과 권리구제를 통한 취약계층 권익보호 : 월 평균 100건
- 노동인권교육 확대 : 특성화고를 비롯한 청소년, 센터 프로그램 참석자 등
- 조사연구를 통한 지역 노동시장 분석과 지역 노동정책 수립 기반 구축
- 노동존중문화 확산과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노조 조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 노조 조직화 및 비정규직노조 운영지원으로 노조운동 활성화에 기여

3)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

- 중앙정부에 앞선 선도적 역할, 지방정부의 일반적 모델로 확산
- 노조로 조직되지 못한 90%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노동권익보호라는 서비스제공
- 다만, 제도화수준과 별개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검증 필요

3. 운영과정에서 확인되는 몇 가지 과제

1) 수탁기관의 문제

- 과도한 개입도 문제지만 무관심도 문제. 대체로 수탁기관은 센터사업에 무관심한 편
 - * 서울본부 전 집행부에서 자치구 지부설립을 통해 자치구 노동행정 개입과 조직화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과도한 추진으로 인하여 역효과 초래
- 일부의 경우 센터 운영시 핵심역량이 센터로 이동하면서 수탁기관의 역량 약화현상 발생
- 수탁기관과 센터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조직화에 기여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아쉬운 노조의 역할

2) 사업영역에 대한 문제

- 센터의 사업영역은 노동상담과 노동인권교육, 노동실태조사, 문화 복지사업 등으로 구분
- 문화, 복지사업에 대한 내외부에서 일부 논란이 있으나 조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과 연동된다는 점에서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음. 오히려 마을공동체 등 특히 지역자원 활용과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담당하는 민간 위탁기관(중간 지원조직)에 대한 사업 필요성 증대

3) 수강생 관리의 문제

- 다양한 사업집행으로 수강생 증가, DB구축 => 조직화 자료로 유의미
- 문제는 조직사업 담당인력의 부재(서울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경우 4명)
- 조직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운영의 유연성 필요

4) 기초지자체 노동행정 도입 부재

- 서울시 혹은 선도적인 기초지자체와 비교할 때 서울시 자치구는 대부분 낮은 수준의 제도화
- 몇몇 조례 제정과 센터 설치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음
- 관련 부서(과 혹은 팀)의 미설치는 물론, 노동정책 수립이나 사업추진은 물론 노동 거버넌스 구축은 아예 시도조차 안 되는 상황
- 지역수준의 대안모색과 더불어 광역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5) 노동복지센터 역할과 기능 재정립의 문제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의 실효성 재검토 : 종합지원의 역할과 기능의 불명확. 사업영역 확대와 권한의 문제, 인력과 예산의 문제 등
- 현재 4명의 센터 인력을 6-7명 수준으로 확대 시급
- 광역센터의 역할과 기능 중에서 자치구센터에 대한 교육과 지원역할을 강화 필요.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과 그에 기초한 정책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센터와 광역센터간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권역센터 설치에 대한 재검토 필요